

민주노총이 4월 24일 총파업을 결정하다

4·24 총파업을 투쟁의 도약대로 만들자

관련 기사 2~4, 16



사진 이미지



[특집] 시리자 집권
그리스는 어디로?

5~12 면

107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여성노동
착취 강화에 맞서자

13 면

성장이 둔화하는
중국 경제

14 면

아이시스 빌미
미국의 군사
개입 반대한다

15 면

동아시아 위기와
사드 한국 배치

15 면

누구의 말일까요?

이완구 : “저를 쳐다보는 애치로운 눈
소리에 제가 가슴이 몽클몽클해서 정
말 참 인품이 훌륭한 분이구나 생각
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우 대표님 눈
물 보니까 저도 울컥해서 저도 모르게
그냥 같이 부둥켜안고 돌이 울었습니
다.”

우윤근 : “정말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
다. 도와드리지 못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우윤근과 이완구의
눈물 나는 우정?

1. 승무원은 결혼 전 반드시 회사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2. 여성 승무원은, 반드시 미혼인 경우
에만 채용한다.
3. 최소 5년간 미혼으로 근무한 뒤 결
혼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4. 승무원이 임신했을 경우 즉시 회사
에 통보해야 한다.
5. 임신은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
으며, 해고될 수도 있다.

세계 10위 항공사라는 카타르 항공의
승무원 채용 조건

“[박근혜가] 나는 한 번도 ‘증세 없는 복
지’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원우철,
유체이탈로도 모자라 기억상실?

“대통령을 잘 알고 청와대를 잘 아는
분을 비서실장에 임명한, 적재적소의
인사라 생각한다.”

새 비서실장 이병기 임명에 대한
새누리당의 화화자찬 논평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왜 몰랐냐.”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해
여군들 질책한 육군 감찰실장

“대통령의 소통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
다.”

이완구, 이병기 비서실장 임명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애당초 내놓아선 안 될 음식”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이
‘불어터진 국수’였다는 박근혜를 비판하며

“솔직히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와도 되
는 자리 같다.”

통일부 장관 류길재,
그리고 뉴라이트 홍용표가 내정됐다

“나라의 기반을 바로 잡기 위한 ‘국가
혁신’ 노력은 더욱 강력하게 추진됐다.
역대 정부가 미뤄 온 공무원연금 개혁
을 추진, 구멍 난 국가 재정의 방벽을
튼튼히 쌓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새누리당 대변인 박대출의
박근혜 정권 2년 평가, 낮찍도 두껍지

“세월호 인양 비용이 얼마인지 아는
가? 숫자를 말하는 분들은 다 틀렸다.
사람을 존중한다면 얼마가 들어가든
무조건 해야 하는 게 세월호 인양이
다.”

유경근 4·16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매우 황당해하고 있다.”

변호사가 전한 대선 개입 유죄 판결에 대한
원세훈의 반응

삼성전자서비스 투쟁

‘진짜 사장’ 삼성이 고용 보장, 임금 인상 책임져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을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41일간의 파업농성
끝에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받는 등 적지 않은 성과
를 냈다.

간접고용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삼성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노동자들
의 힘을 보여 주는 등 정치적 의미도
컸다. 그간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
이라고 발뺌하던 삼성전자서비스 사
측은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에 밀려
“원청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
실하겠다”고 발표해야만 했다.

그런데 삼성전자서비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주기로 한
임금과 수당 등을 제대로 주지 않았
다. 뿐만 아니라 진주, 마산, 서수원
센터가 폐업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
도 위협하고 있다. 센터 ‘바지 사장’들
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뻔뻔한
행태도 여전하다.

사측은 연이은 센터 폐업이 노동자
들의 파업과 무리한 요구 때문에 “정
상 영업”이 어려워져 생긴 일이라며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비열한 거짓말일 뿐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의 A/
S를 담당한다. 그런데 실제 수리 업무
대부분을 협력업체가 맡고 있다. 삼
성전자서비스는 지난 몇 년간 이 협
력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을 계속 줄였
고, 협력업체는 다시 노동자들에게
주는 몫을 줄였다.

노동자들을 간접고용하고 임금을
건당 수수료로 지급하는 삼성전자서
비스의 고용 · 임금 체계 때문에 삼성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센터 앞에서 매일 아침 일인 시위를 하는 노동자들

전자는 노동자들을 더 쉽게 착취할
수 있었다.

노동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
야 했다. 임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했
고, 성수기에는 몸이 부서져라 일하
고 비수기에는 ‘보릿고개’를 버티는
일들이 반복됐다. 노동자들이 노동조
합을 만들고 투쟁에 나선 것도 이 때
문이었다. 노동자들이 기본급과 수당
등을 요구한 것은 인간답게 살기 위
한 최소한의 요구였다.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려
면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에 지
급하는 비용을 늘려야 하지만, 원청
은 ‘바지 사장’들에게 책임을 떠넘기
고 있다.

구조조정

이런 치졸하고 악랄한 행태는 최근
삼성전자의 매출 부진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이 30퍼센트 감소했다. 더 큰 문제는
삼성전자 매출의 60퍼센트 이상을 차
지하는 IT · 모바일 분야의 사업 전망
이 앞으로도 매우 어둡다는 것이다.
저가 시장에서는 중국 등에 밀리고
고가 시장에서는 애플에 밀리면서,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휴대폰의 세
계 시장 점유율은 10퍼센트대로 주저
않았다.

삼성전자는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서비스를 통
해 가장 열악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게도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최근 연
이은 서비스센터 폐업은 노동자들을
위축시켜 구조조정을 더 원활히 하려
는 계획의 일환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투쟁이 매우 중요하
다. 노동자들의 결집된 힘을 보여 줘
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이후 벌어질

수 있는 더 큰 공격도 잘 막아 낼 수
있다.

모바일 분야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반도체 부문 호조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여전히 수조 원의 이익을
내고 있다. 총수 일가는 3대 경영 승
계 과정에서 세금 한 톨 내지 않고 막
대한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다. 따라
서 사측이 경영 부진을 이유로 노동
자들을 공격하는 것에 움츠릴 이유가
없다.

민주노총이 4월 총파업에 나서는
등 노동자 투쟁이 살아나고 있는 상
황도 우리에게 유리하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모진 탄압 속에서
노조를 만들고 투쟁해 조직과 경험을
쌓아 왔다.

삼성에 맞서 다시 투쟁을 시작한 노
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조명지

세종호텔 노조 투쟁

“누군가는 지키고, 싸워야 합니다. 그게 세종노조입니다”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
노동자들이 연봉제 폐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당전보 철회, 해고자 원
직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다수 노조인 세종연합노조의 사측
친화적 집행부가 노동자 쥐어짜기를
수용한 반면, 세종노조는 소수 노조
임에도 세종호텔 전체 노동자들의 이
익을 방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세종호텔 사측은 지난해 말부터 연
봉제를 확대해 임금을 20~30퍼센트
삭감하고 전 · 현직 위원장을 포함해
세종노조 조합원들을 대거 부당전보
하는 등 노골적 공격을 벌였다.

세종노조는 이에 맞서 총회를 열고
적극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노조는
아침마다 호텔 앞에서 음악을 틀고
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2004년에 회
계부정으로 세종대에서 쫓겨난 적이
있는 현 세종호텔 회장 주명건을 폭
로하는 대형배너도 내걸었다.

사측 경영진이 정 · 재계 인사들과
오찬 모임을 하는 날에도 확성기로
투쟁가요를 트는 등 항의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호텔 객실에서 일하
는 노동자들은 창 밖에서 들리는 투
쟁가요 소리에 힘이 난다고 한다. 최
근에는 지난 2년 동안 이어져 온 목

요일 정기 집회에 참가하는 조합원과
연대 단체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최근 사측은 “[도어맨] 업무에 상당
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노조의 항의 행
동이 업무방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나
섰다. 중단하지 않으면 “민 · 행사상 조
치 및 징계 처분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협박도 잊지 않았다.

“조합원이라는 게 당당해요”

그러나 조합원들은 “노동자들을 노
예처럼 부려먹게 할 수는 없다”며 사
측의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있다.

김상진 세종노조 전 위원장은 부당
전보에 항의하며 발령 부서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 최근 사측은 설 상여
금부터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생계를 압박해 무릎 꿇리려는 것이
다. 그러나 김상진 전 위원장은 “쫓쫓
하게 사측의 구조조정 막아내고 끝까
지 승리하는 싸움 만들겠다”며 투쟁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객실 청소 · 정리에서 로비 청
소 · 정리로 전보된 여성 조합원은
“우리를 로비 청소로 보낸 것은 부끄
러워서 그만두라는 것이겠지만 우리
는 버텼어요. 그러자 이상한 모양의
모자를 쓰게 해서 모멸감을 주려 했
어요. 이제까지 싸워 왔는데 모자 때

문에 기적거나 하지 않아요” 하며 굴
복하지 않을 것이라 결의를 밝혔다.

특히 조합원들은 민주노조를 지켜
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 함께
싸워 노동자들이 기죽지 않게 해 온”
조직이 바로 세종노조이기 때문이다.

2006년 김상진 위원장이 당선한
뒤 세종노조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1년 근무 후 계약직 정규직 전환 절차
마련 등을 쟁취했다. 계장급까지 적
용하던 연봉제도 호봉제로 전환했다.
2012년에는 38일간 호텔 로비 점거
파업 투쟁을 벌여 1년 이상 근무한 비
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고용안정협약
준수, 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의 성과
를 얻었다. 덕분에 세종호텔의 비정
규직 비율은 다른 호텔에 견줘 매우
낮은 수준이다.

사측은 사측에 우호적인 세종연합
노조 집행부를 이용해 이런 투쟁의
성과들을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2012년 파업
으로 정규직이 된 한 여성 조합원은
“세종호텔에 와서 가장 기뻐던 순간
은 정직원이 됐을 때가 아니라 노조
조합비를 내라고 했을 때”라고 말했
다. “사람들은 노조가 없는 게 어떤 건
지 잘 몰라요. 신라호텔 용역으로 일

할 때는 그냥 개처럼 일했어요. 우리
는 발언권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세
종호텔에 오니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
였어요. 과장이 부당한 말을 하면 항
의도 하고 말이에요. 지금 조합원이
라고 탄압받지만 용역으로 일할 때와
는 비교가 안 돼요. 여기에선 싸울 수
있잖아요.”

“사측은 우리를 밀바닥일 하는 사
람들이라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나
름 투쟁하고 목소리를 내니까 무시
할 수는 없죠. 설사 우리가 지더라도
쪽팔리고 싶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
도록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거예
요.”(지난해 12월 부당전보된 조합원)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
와 연대를 보내자. 3월 7일 세종호텔
노조가 여는 후원 주점에도 많은 관
심과 적극적인 후원을 바란다.

김지윤

인터뷰·정리 박세영, 성지현

구조조정 저지! 노조탄압 분쇄! 민주노조 사수!
**특급호텔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한
세종호텔 특급 주점**
일시: 2015년 3월 7일(토) 오후 2시~11시
장소: 호프 숭(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92-3)
후원 계좌: 신한은행 110-292-518564(김상진)

민주노총이 4월 24일 총파업을 결정하다

4·24 총파업을 투쟁의 도약대로 만들자

김하영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4월 총파업을 결의하고, 날짜를 4월 24일로 정했다.

박근혜는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만큼은 반드시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오히려 이를 강행하는 추진력을 보여 줌으로써 핵심 지지층의 신임을 회복하려 한다.

박근혜는 설 직전에 민주노총을 배제한 ‘노사정’ 간담회를 열어, “청년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꼭 실현돼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실업 청년과 비정규직 고통의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사악한 이간질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가 추진하려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전체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끌어내릴 것이다. 임금을 낮추고,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노후자금을 강탈해 자본의 비용을 줄여 줌으로써 말이다.

한상균 선임 민주노총 위원장이 1997년 IMF를 핑계로 도입된 정리해고제와 파견 근로제보다 “더 센 놈이 오고 있다”고 경고하며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하는 이유다.

1997년 이후 국민총생산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떨어졌다. 노동자들이 창출한 부에서 그들이 실제로 가져가는 몫이 크게 줄고, 자본이 가져가는 몫이 늘었다는 의미다.

우리의 피땀을 더 빼앗길 것인지, 저들의 공간을 열 것인지是我们的 투쟁에 달렸다. 돈이 없는 게 문제는 아니다.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만 5백 조 원이 넘는다. 국내총생산의 36퍼센트에 이르는 규모다.

이 점에서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은 단지 조직 노동자들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삶을 건 중요한 투쟁이다.

또한, 박근혜와 한판 붙고 싶은 사람들은 민주노총이 앞장서 박근혜에 맞서 주기를 바라고 있다.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식에서 세월호 유가족 임정호 씨는 박근혜 통치 아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렇게 대변했다.

“전에는 총파업이 의례적인 말로 들렸지만, 지금은 민주노총 80만 전체 조합원의 총파업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4·24 총파업은 전체 노동자들의 삶을 건 투쟁

2월 25일 노동·사회단체 대표자 1백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4월 총파업을 선언한 민주노총. 본격적으로 '박근혜와 맞짱'에 드라이브를 건 민주노총에 지지가 모이고 있다.

4·24 총파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두 가지 과제

민주노총이 4월 24일 총파업을 결정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조직하는 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

대의원대회에서 일것 결정해 놓고 산하 노조들이 ‘현실적’ 여건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총파업 결의문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말 것이다.

총파업의 실질적 성사를 위해서는 첫째, 민주노총이 정한 4월 24일에 맞춰 산하 산별연맹과 노조들이 함께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노조 지도자들은 각 노조의 여건에 맞게 다양한 일시와 방식으로 투쟁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총파업의 효과를 낼 수 없다. 단 하루일지라도 모든 부문의 노동자들이 함께 파업에 돌입해, 공장을 멈추고, 관공서를 멈추고, 마트를 멈추고, 학교를 멈춰야 한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 제동을 걸려면 하루 총파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4·24 총파업은 부문별 파업

과 점거와 시위 같은 앞으로의 투쟁을 위한 도약대가 돼야 한다.

그런데 도약대가 허약하면 제 구실을 할 리 없다. 4월 24일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총 결집해서 위력적인 힘을 보여 줘야, 정부에 경고를 보내고 조합원들에게 다음 투쟁을 향해 전진할 자신감을 줄 수 있다.

한날한시

이 점에서, 이미 4·24 총파업 동참을 예고하고 있는 전교조나 건설노조 등만이 아니라, 금속노조나 공무원노조 등이 파업 일정을 4월 24일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금속노조 중앙위는 “노동법 개악안 상정 시나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시” 파업을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조건부 파업은 사태를 반전시키기에 너무 늦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었다. 금속노조 활동가들은 3월 3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4·24 총파업 동참

이 결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4·24 총파업 참가에 회의적인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은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고 총파업에 나섰다가 탄압에 직면할 것을 크게 우려한다. 이런 우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합법주의 입장에 서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총파업은 아예 불가능하다. 저들의 법이 권위를 갖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굴복할 때다. 다 함께 파업해 위력을 발휘하면 탄압도 무력화 또는 적어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기면 합법이고 지면 불법”이다.

둘째, 4월 24일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단지 하루 일터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쉬는 날이 아니라 시위의 효과를 실제로 내, 집회 참가자들의 자신감을 북돋고 정부를 압박하는 날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서울로 상경해서 되도록 큰 규모의 집회와 시위를 해야 한다.

물론 작업장 점거와 지역 집회들이 결합되면서 총파업이 여러 날 이어질 수 있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재 활동가들은 무기한 총파업 계획을 지지할 만큼 자신감이 높지는 못하다. 이번 4·24 총파업 성공을 사기 진작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일부 산별연맹은 간부들만의 상경 집회에 총파업을 때우기도 했던 터라, 활동가들은 형식적인 일회성 상경집회에 대해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장을 멈추는 실질적인 파업과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규모 상경집회는 결코 대립되지 않는다. 활동가들은 둘의 결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현장 노동자들을 조직하지 않은 채 간부 동원에 머물거나 소수의 보여 주기 식 거리 대치로 때우는 것을 막고, 파업과 시위 모두에서 현장 조합원들의 참여를 중심에 놓을 수 있다.

현장 활동가들이 파업 조직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 계획을 반기는 조합원들도 과연 자신의 산별연맹이나 노조 집행부가 파업을 할지 걱정한다.

산별연맹과 대공장 노조 지도자들이 민주노총 총파업 계획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경우가 적잖았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기우가 아니다. 예컨대 민주노총 2기 이갑용 집행부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갑용 집행부는 투쟁적인 좌파 지도부였지만 약속했던 총파업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철회했다.

좌파 지도부의 등장은 투쟁에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열쇠는 현장 조합원들에게 있다.

현장 활동가들은 총파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기층에서 실질적인 파업 조직에 나서야 한다. 4·24 총파업에 뜻미치근한 자신의 산별연맹이나 노조 집행부에 압력을 가하고, 현장 조합원들이 행동에 나설 자신감을 갖도록 설

득하고 조직해야 한다.

현장 활동가들의 네트워크가 있다면 이런 일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산별연맹과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 결의를 이끌어내고, 현장에서 총파업 토론회를 개최하고, 총파업 실천단을 조직하고, 현장과 결합해 크고 작은 집회와 투쟁을 조직할 수 있다.

기층에서 이런 활동이 벌어지면, 노동조합 지도자들 사이에서 투쟁적인 좌파 지도자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다. 반

면 이런 기층의 활력이 없으면, 아무리 투쟁적인 지도자일지라도 다른 산별연맹 지도자들에게 기대고 점점 더 그들과 보조를 맞추려 할 수 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 전체의 기풍과 정신, 규범에 순응하라는 압력에 굴복하면서 말이다.

총파업에 대한 한상균 위원장의 의지는 확고하다. 하지만 그것을 성사시킬 힘은 현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비록 지금 현장 조합원들의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는 아니지만, 활동가들이

파업 조직을 위한 활동에 나서면 현장 조합원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다양한 주요 시사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정치적 주장도 중요하다.

활동가들은 사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4·24 총파업 조직에 매진해야 한다.

총파업 총투표
3월 23~31일

들러리임이 드러난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 탈퇴하고 파업 조직에 집중해야

박천석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 책임간사

설 연휴 직전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여야가 합의한 기한 내에 완료해 달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신임총리 이완구도 “복지 구조조정”과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을 완수하려면 공무원연금부터 개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새누리당 김무성은 공무원 연금을 개악해야 “나머지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통해 우파의 결속을 다지고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한 정책 추진에 가속도를 붙일 생각이다. 그래서 출범할 때부터 ‘들러리’ 기구인 대타협기구는 더욱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김현숙은 “국회특위가 공무원연금법 외 다른 법안은 처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도 수차례 “[공무원연금 개혁안] 대타협기구에서 잘 논의되길 바란다”고 하더니 정작 논의를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안을 내놨다. 대타협기구를 노골적으로 들러리 취급한 것이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투본’은 이

를 “치졸한 공작”과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대타협기구 운영을 보면 공투본을 들러리 세우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이 구성한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이하 ‘사수넷’)는 처음부터 여야가 합의한 대타협기구는 아무 결정 권한도 없는 들러리 기구임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도 공무원노조 지도부와 대타협기구 참가 단체들은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공적연금으로 의제 확대, 국회연금 특위보다 대타협기구 합의가 우선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참여를 결정했다.

이때도 ‘사수넷’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합의는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였고, 논의 기간도 90일밖에 안 되니 공적연금을 위한 논의는 가능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심지어 정부는 이충재 위원장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고,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노조를 전혀 대화 상대로 보지 않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대타협기구가



“[대타협기구를] 들러리 세우면 언제든 빠진다”(공투본) 이 말대로 행동할 때다

들러리라고 규탄하면서도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대타협기구 참여 조건을 다시 한 번 상기”하라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일회성 규탄 기자회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당장 대타협기구를 탈퇴해야 한다. 들러리 기구에 시간과 노력을 뺏기지 말고 3월

28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 조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전교조 지도부와 공조해 총파업을 조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탄력 받는 사내하청·간접고용 노동자 투쟁

대법원이 2월 26일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연이은 하급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까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대법원은 다시금 엔진·차체·서브 등 간접부서까지 포함해 생산직 사내하청 전원을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했다. 소를 제기한 현대차 아산 비정규직 7명 중 3명이 패소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옛 파견법이 2년 미만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들의 불법파견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했다.

이는 10년 넘게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해 온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력이 빛을 값진 성과다.

이번 판결은 정몽구의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8·18 신규채용 합의’를 거부하고 싸워 온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옳았음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2월 초엔 울산뿐 아니라 아산 사내하청지회도 8·18 합의 폐기를 노조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했다.

그런데도 현대차 정규직지부 이경훈 집행부가 8·18 합의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3월 3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대의에 찬물을 끼얹은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의 평가서를 바로잡고, 다시금 8·18 합의 폐기 방침을 분명히



끈질긴 투쟁으로 성과를 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확인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현대차 비정규직뿐 아니라,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며 투쟁해 온 제조업·서비스업 등의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가 고령자부터 파견을 확대하고, 불법파견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정규직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는 상황이라 더 그렇다.

이에, 현대차 울산·아산 비정규직 지회는 오는 3월 중순부터 전국의 불법파견·위장도급 작업장을 순회하며 불법파견·간접고용 철폐와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비정규직 공동 투쟁의 불을 지펴 나가기로 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광범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가)장그래살리기 운동본부’ 준비위원회도 이런 사내하

청 노동자들의 전국 순회를 지원하는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순회단이 도착하는 작업장과 지역마다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들,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결집해 함께 간담회를 하고 집회를 하며 연대 투쟁의 기운을 모아 나가야 한다.

이는 3월 말~4월 초 파업을 준비 중인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도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준비해 온 공동투쟁 건설 노력에도 탄력을 줄 수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 연대해야 한다. 4월 24일 총파업 건설 과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 투쟁을 조직하는 것과 떨어져 있지 않다.

박설

서울대병원 노조가 4월 총파업 동참을 결의하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가 2월 26~27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에 맞춰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해부터 의료 민영화와 가짜 ‘정상화’(임금과 복지 삭감)에 맞서 끈질기게 싸워 왔다. 그 결과 서울대병원 사측이 추진하려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일부 저지하고 가짜 ‘정상화’ 밀어붙이기에다 꺾기까지 버텼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는 지난 1월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국립대병원 11곳을 정상화 미이행 기관으로 지목해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성과연봉제 도입과 각종 수당 폐지·변경 등 임금 삭감, 복지 삭감 등 가짜 ‘정상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016년까지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 초 서울대병원 사측에 1월 중 취업규칙 개정안에 과반수 서명을 받아내라고 지침을 내렸다.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과반 노조의 동의 혹은 노동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집단적 동의

권을 공격해, 노동자들의 조건을 끌어내리기 쉽게 만들려 한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공격을 밀어붙여 전제로 확산하려는 심산이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사측은 저돌적으로 공격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해 말 일방적으로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 노동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협박을 일삼으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서명도 받고 있다.

서명자 숫자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점점 노동자들 사이에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사측이 취업규칙 변경 설명회를 시작한 12월 15일부터 3주 동안 4백여 명이 새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서울대병원 노조 집행부도 이런 노동자들의 반응에 힘입어 4월 파업을 추진해 왔다. 민주노총이 4월 24일 총파업을 결정하자, 더 탄력을 받았다.

서울대병원 노조가 민주노총과 한 날한시에 함께 파업에 돌입한다면 박근혜 정부에도 큰 압력을 줄 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의 사기도 높아질 것이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고 의료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장호중

맑시즘2015 하이라이트

유럽의 정치 양극화 — 그리스 시리자에서 파리 공격까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조셉 추나라가 2월 6~8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5’ 참가를 위해 방한했다. 이 글은 추나라가 2월 7일 강연한 ‘유럽의 정치 양극화 — 그리스 시리자에서 파리 공격까지’를 녹취한 것이다.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자 연대> 편집자가 첨가한 말이다.

2015년 1월 유럽의 양극화를 보여 주는 사건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샤를리 에브도>와 유대인 상점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이 사건들 자체도 끔찍했지만, 그보다 더 끔찍했던 것은 주류 우파 정치인들이 대중의 희생자 추모 정서를 이용해 이슬람 혐오와 인종차별을 부추기려 했던 것입니다. 만약 프랑스에서 내일 대선이 치러진다면, 파시스트인 마린 르펜이 당선할 가능성이 큼니다.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가 곧장 파시즘으로 넘어갈 상황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프랑스 지배계급이 파시스트에게 권력을 넘겨야겠다고 느낄 만큼 위기가 심각한 것은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마린 르펜 세력이 성장하는 것은 유럽 전역에서 파시즘이 정치 생활에 얼마나 침투해 들어왔는지를 보여 주는 징후입니다.

둘째 사건은 제가 보기로 매우 희망적인 것인데, 그리스의 시리자가 총선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시리자의 집권은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최초로 유럽에서 급진좌파가 집권한 사건입니다.



맑시즘2015에서 연설하는 조셉 추나라

조영민

정치 양극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양극화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우선,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럽에서 중도 좌파나 중도 우파인 주류 정당들의 지지가 허물어져 왔다는 사실을 봐야 합니다. 이 현상은 [2007~08년] 경제 위기 전부터 나타났는데,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 모두 신자유주의를 시행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경제 위기 발발 이후로 중도계 주류 정당들의 지지 하락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가 번갈아 집권하면서 현실의 검증을 받았는데, 둘 다 노동자를 더욱 공격하기만 했습니다.

1950년 영국 총선에서는 주요 정당

인 노동당 · 보수당 · 자유당이 모두 합쳐 99퍼센트를 득표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에 치러질 총선에서 세 정당의 득표율은 60~70퍼센트가량 될 듯합니다. 스페인에서는 보수당과 사회당의 득표율이 1980년대 이후로 80퍼센트를 유지하다가 이제는 약 50퍼센트로 떨어졌습니다. 그리스 사회당은 2009년에는 44퍼센트를 득표해 집권했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5퍼센트도 득표하지 못했습니다.

주류 정당들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점점 더 급진좌파와 급진우파를 보며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양상이 다르다

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우파들의 성적이 매우 좋고, 아쉽게도 좌파들은 죽을 췌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 · 스페인 · 아일랜드에서는 좌파들의 상황이 훨씬 더 낫고, 우파들의 성장은 훨씬 더 느립니다. 독일에서는 좌파와 우파 모두 성장하고 있지만 속도는 느립니다. 양상이 서로 다른 것은 세 가지 요인 때문입니다. 첫째, 경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 둘째, 노동자 계급의 투쟁 수준은 어떠한가? 셋째, 정치 전통은 어떠한가? 급진우파를 먼저 살펴본 다음 급진좌파를 살펴보겠습니다.

급진우파의 성장

급진우파들이 성장한 궤적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급진우파들은 모두 긴축으로 말미암은 대중의 고통과 환멸을 이용하고, 주류 정치권에 맞서는 존재로 자신을 포장하고, 흔히 유럽연합에 반대합니다. 급진우파는 하나같이 이민자와 무슬림에 대한 주류 정치권의 인종차별 사상을 차용해 그것을 더 급진적 버전으로 증폭시키고 속죄양 삼기를 자행합니다.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일어난 <샤를리 에브도> 공격 사건을 이해하려면, 그동안 프랑스에서 성장해 온 이슬람 혐오의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무슬림 이민자들은 공평을 강요당하고 사회언저리로 밀려날 뿐 아니라, 종교를 이유로 조롱당하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프랑스의 무슬림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



그리스의 파시스트 정당인 황금새벽당 시위대

무슬림 복장(베일)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프랑스의 많은 좌파들이 잘못된 입장을 취했습니다. ‘세속주의자는 종교에 반대한다’면서 말이죠. 저도 무신론자이지만, 종교적 복장을 금지한다고 해서 그들을 종교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무슬림 복장이든 미니스커트든 무엇을 입는지는 여성의 자유입니다.

프랑스의 무슬림은 전체 인구의 10퍼센트를 차지하는데, 교도소 수감자 가운데는 50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샤를리

에브도>를 공격한 사람들은 모두 감옥에서 급진화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극소수 사람들이, 이슬람 혐오적 만화를 게재해 온 <샤를리 에브도> 같은 잡지에 분노를 터뜨린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지배자들은 이런 방식의 분노 표출에 대응해 무슬림을 한층 더 차별하고 공격할 것이고, 이것은 결국 더 많은 테러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사회 기층에서 무슬림과 비무슬림의 단결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급진우파의 네 가지 유형

인종차별을 먹고 자라는 극우 조직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노골적인 파시스트 조직입니다. 그리스 황금새벽당이 대표 사례입니다. 황금새벽당은 이번 총선에서 6퍼센트를 득표했습니다. 황금새벽당은 홀러코스트가 없었던 일이라고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홀러코스트를 재연하려 합니다. 열등한 인종을 박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부분의 파시스트 운동과 마찬가지로 황금새벽당은 인종차별 사상을 이용해 회원들을 결속시키고 지지를 이끌어냅니다.

또한 황금새벽당은 좌파와 노동조합을 공격한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황금새벽당은 파시즘의 고전적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지배계급을 대신해 노동자 계급을 파괴하고 원자화시킨다는 목표입니다.

둘째, ‘유러파시스트’라고 불리는 유형입니다. 영국국민당(BNP)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나 유러파시스트 조직의 가장 중요한 사례는 마린 르펜이 이끄는 프랑스의 국민전선(FN)입니다. 유러파시스트 조직들의 핵심부에는 강경 파시스트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2012년 마린 르펜은 아우슈비츠 해방을 기념한다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비밀 무도회에 참가했습니다. 그 행사는 홀러코스트를 부인하는 자들과 오스트리아 파시스트 조직이 주최한 행사였습니다. 국민전선 같은 유러파시스트가 황금새벽당 같은 노골적 파시스트와 다른 점은 강경 파시즘 사상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점잖은 정치인 행세를 한다

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궁극 목표는 선거에서 거둔 성공을 이용해 거리 전투 조직을 만들어 노동자 계급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셋째, 최근 몇 년 사이 나타난 거리운동 조직입니다. 영국에는 영국수호동맹(EDL)이 있는데, 이 조직에는 홀리건(폭력을 마구 휘두르는 축구 팬)들과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있고, 파시스트도 일부 있습니다. 영국수호동맹은 선거에 출마하지는 않고 무슬림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거리 행진을 벌이며 무슬림들을 겁주는 것에 집중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례는 독일의 페기다 운동입니다. 페기다는 유럽이 ‘이슬람화되는’ 것에 맞서 싸운다고 주장합니다. 페기다는 드레스덴 등 독일 일부 지역에서 수만 명 규모의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시위대 구성은 다양했지만, 파시스트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페기다가 분열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페기다 지도자가 히틀러 복장을 하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내부 반발에 부딪힌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페기다 운동에 맞선 거대한 맞불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넷째 유형의 극우 조직은 이번 경제 위기를 틈타 성장했는데, 이들은 우익 포퓰리스트라고 규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익 포퓰리스트로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라는 독일의 신생 정당, 네덜란드 자유당(PVV), 영국의 영국독립당(UKIP)이 있습니다. 영국독립당은 최근 선거에서 의원 두

▶ 6면으로 이어짐

▶ 7면에서 이어짐

명을 당선시키는 등 꽤 성장하고 있습니다. 연사로만 보면 영국독립당과 프랑스의 국민전선이 비슷해 보여서, 사람들이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예컨대 영국독립당 대표 나이절 패라지는 “루마니아 출신 이민자의 옆집에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익 포퓰리스트 조직은 유러파시스트 조직과 달리 핵심부에 파시스트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보다는 주류 우파 정당에서 더 오른쪽으로 떨어져 나간 세력입니다. 우익 포퓰리스트 조직은 인종차별 사상을 이용하면서 주류 정치권에 반대하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만만찮은 세력으로서 주류 정치권에 편입되려고 합니다.

우익 포퓰리스트들은 파시스트는 아니지만, 그들이 성장하면 정치적으로 위협합니다. 첫째, 주류 정치 담론을 전체적으로 더 오른쪽으로 옮김으로써, 극우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 줍니다. 둘째, 파시스트들이 우익 포퓰리스트 조직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네덜란드 자유당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영국독립당 같은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의 성장은 색다른 어려움을 제기합니다. 그들이 파시스트 조직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영국독립당에 맞서 일어서자’(Stand up to UKIP)라는 조직을 건설해 인종차별 사상에 저항하고 영국독립당의 정치에 이의제기를 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시리자의 집권은 계급투쟁의 고조를 반영한다

지금부터는 좌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의 시리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 시리자가 가장 흥미진진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시리자가 집권 뒤 처음으로 한 일은 재무부 청소 노동자들을 재고용한 것입니다. 재무부 청소 노동자들은 2년 전에 해고돼 최근까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그리스에 강요됐던 몇몇 민영화 계획을 취소한 조치가 상정하는 바는 매우 큼니다. [그러나 2월 24일 시리자 정부는 민영화 계획을 취소하지 않기로 유럽 지배자들과 합의했다. — 〈노동자 연대〉 편집팀]

시리자는 그리스 공산당에서 이탈해 나온 세력들이 여러 차례 합병과 분열을 겪으면서 등장한 조직입니다. 거기에 일부 트로츠키주의 단체와 마오주의 단체도 합류했고, 전에는 사회당(PASOK)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합류했습니다.

시리자는 연합 조직으로 2004년 처음으로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그러다 2012년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 사회당의 득표가 폭락했고, 시리자가 17퍼센트를 득표하면서 제2의 정당이 됐습니다. 시리자는 주로 도시 노동자 계급에게서 표를 받았습니다. 그 중 다수는 전에 사회당에 투표했었습니다.

시리자의 집권은 2007년 이후 그리스 노동자 계급 투쟁이 고조돼 온 상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총파업이 32건 있었고, 전국 곳곳에서 광장 점거와 행진과 시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급진좌파의 성장이 그리스에서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급진좌파의 성장은 단지 그리스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스페인에서도 창당한 지 1년도 채 안 되는 신생 정당 포데모스가 약진하고 있습니다. 포데모스 지지자의 다수는 대규모 광장 점거 운동인 ‘인디그나도스’ 운동 등 투쟁에 참가하고 지지를 제공한 사람들입니다. 1월 31일 스페인 마드리드 등지에서 십여만 명이 시리자의 승리를 축하하며 행진을 벌였습니다. 올해 12월에 치러지는 스페인 총선에서 포데모스가 승리하면, 유럽에서 급진좌파 정부 두 개가 들어서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상황 전개입니다. 투쟁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대중이 정치 일체를 거부하면서 ‘반정치’(anti-politics)가 우세해

지고 있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들은 매우 정치적입니다. 물론 대다수 노동자들의 의식은 개혁주의적이지만 말이지요. 달리 말해 대다수 노동자들은 자본주의가 인류의 필요에 맞게 개선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기존의 전통적 개혁주의 조직들은 지지자들을 배신했고 더는 개혁을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로 좌파 개혁주의인 시리자와 포데모스가 급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포데모스는 자기 정치를 선명하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정치 카스트와 기업인 등에 반대해 민중을 대변한다.” 포데모스는 그 속에 혁명가들이 포함돼 있지만, 조직 자체의 성격은 개혁주의입니다. 시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자의 전략은 ‘국가를 장악하고 그 국가를 이용해서 개혁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시리자 내 극좌파인 스타시스 쿠벨라키스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시리자는 반자본주의 연합체로서 권력 문제를 다룰 때 선거 연합 결성 및 선거를 통한 집권과 아래로부터의 투쟁 및 대중운동 사이의 변증법에 집중한다.” 그러나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와 대중운동 가운데 무엇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가?

시리자 대표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긍정적 일을 여럿 했지만, 그리스독립당과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악수를 뒀습니다. 그리스독립당은 우파 정당이고, 당 대표는 유대인과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새 정부의 국방부 장관을 맡기로 했습니다. 시리자가 꼭 연정을 구성해야 하는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시리자는 의석이 절반 이상은 안 되더라도 정부를 구성하고 다른 좌파 정당들에 압박을 가해 정부 정책에 찬성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독립당과의 연정 구성은 시리자에게 의회의 논리가 투쟁의 논리를 압도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시리자 내 좌파들은 이런 움직임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시리자 지도부는 당내 규율을 강화하려 했고, 그럼으로써 당내 좌파의 운신의 폭을 줄이려 했습니다. 스페인의 포데모스도 지난 몇 달 사이에 비슷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정부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책임감 있는 정당으로 비쳐지려 하면서 당내 좌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반파시즘 투쟁과 혁명적 사회주의자의 구실

급진우파의 성장에 맞서 항상 좌파의 대응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영국과 그리스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영국과 그리스 모두에서 노동자연대의 자매조직인 혁명적 좌파들 [두 나라 사회주의노동자당이 파시즘에 맞선 공동전선을 건설하는 데 주도력을 발휘했습니다. 우리는 공동전선을 건설하면서 개혁주의 지도자들과 기층 지지자들 모두에게 파시즘에 맞서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무슬림 단체와 이민자 단체들뿐 아니라, 노동당과 노동조합도 반파시즘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공동 행동을 건설하는 동시

에 혁명가들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반파시즘 운동이 전투적 전술을 채택하도록 애썼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수호동맹이 무슬림 거주 지역에서 거리 행진을 벌이려 할 때 우리는 더 큰 맞불 행진을 벌여야 한다고 선명하게 주장했습니다. 또, 영국국민당이 [파시스트] 정체를 숨기고 점잖은 정당 행세를 할 때 우리는 그들의 수뇌부가 파시스트라는 것을 들춰냈고, 그럼으로써 그 지지자들을 지도자들로 부터 떨어뜨려 놓을 수 있었습니다. 영국국민당은 몇 년 전에는 지자체 의원 50명과 유럽의회 의원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 한 명의

의원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도시에서 영국수호동맹이 이슬람 사원 쪽으로 행진하려는 것을 가로막은 적이 있습니다. 며칠 후 영국수호동맹의 대표는 그날이 자신의 생애 최악의 날이었다면서 대표 자리에서 사임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극우에 맞서 투쟁적 단결을 조직할 태세가 된 사람들이 있으면 극우 운동을 막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월 21일 유럽 곳곳의 대도시에서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국제 행동의 날 시위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 행동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투쟁을 조직할 것입니다.



사진 출처: George Loulakis (블라카)

“2007년 이후 그리스에는 총파업이 32건 있었고 전국 곳곳에서 광장 점거와 행진과 시위가 있었습니다.”

시리자 정부가 맞닥뜨릴 난관들

심지어 시리자가 더 강경한 좌파적 노선을 가려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국가는 좌파든 우파든 집권만 하면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중립적 기구가 아닙니다. 국가의 핵심부에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들이 있고, 이 자들은 자본에 동질감을 느낍니다. 학자들은 이런 것을 일컬어 ‘심층 국가’(deep state)라는 용어를 씁니다. 아테네 경찰의 50퍼센트가 파시스트 정당인 황금새벽당에 투표했었습니다. 2013년 황금새벽당 지도자들이 범죄 조직 결성·운영 혐의로 체포됐는데, 그때 경찰 고위간부 두 명과 정보부 관료도 연루됐음이 드러났습니다.

시리자와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한 그리스독립당의 장관들은 이렇게 압박하는 세력과 정부를 잇는 다리 구

실을 할 것입니다. 치프라스는 그리스 국가를 지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1973년 칠레의 아옌데가 칠레 국가를 장악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지요. 국가가 항상 민주주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그리스는 국제적 압력을 얼마 아파하게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는 부채를 일부 탕감받고 싶어 할 텐데, 독일이 막을 가능성이 큼니다. 이때 치프라스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을 것입니다. 하나는 돈을 더 빌리기 위해 긴축을 시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디폴트를 선언하면 그리스는 신탁장꾸 유료존에서 나와야 할 것이고, 그러면 그리스 은행 시스템을 국유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

니다. 그런데 치프라스는 이런 방향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 두 마리를 탈 수는 없는 법입니다. 결국 그리스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의회 밖에서 벌어지는 투쟁의 결과일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는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입니다. 즉, 긴축을 끝내려면, 그리고 대중의 필요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키려면, 그리스 자본가들과의 격돌이 불가피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는 석유 수출 수익에 기대어 적대 계급들의 충물을 비껴갈 수 있었지만, 치프라스에게는 그럴 만한 수단이 없습니다. 그리스 지배계급은 자신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것에도 아주 결연히 저항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투쟁이 결정적 변수가 될 것입니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과제

— 공동전선과 독립적 혁명 조직 건설하기

이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시리자 밖에 있는 좌파의 과제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리자 바깥의 최대 좌파는 공산당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5퍼센트를 득표했습니다. 공산당은 노동조합과 학생회에서 시리자보다 기반이 더 큼니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공산당은 시리자뿐 아니라 운동에 대해서도 매우 종파적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전역에서 청년들이 광장을 점거했을 때 공산당은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청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러분은 곧 지배자들에게 이용당하고 말 것이다.’ 공산당은 때때로 초좌파적으로 주장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든 안 하든 관심 없다. 유로화든 [옛 그리스 화폐인] 드라크마하든 자본주의 화폐이긴 마찬가지다’ 하는 식입니다. 이런 태도의 귀결은 수동성이고, 운동에 대한 종파적 태도입니다.

레온 트로츠키가 말했듯이, 사람들이 투쟁에 나선다고 해서 개혁주의적 의식이 곧바로 혁명적 의식으로 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점근법[계산을 할 때 먼저 어떤 근사값을 구하고, 그것을 이용해 더 가까운 근사값을 구해, 점차 정확도를 높여가는 방법]처럼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혁명적 의식으로 다가갑니다. 따라서 좌

파는 투쟁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하고, 동시에 토론하고 논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이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사회주의노동자당은 안타르시아라는 더 큰 반자본주의 연합체에 소속돼 있기도 합니다. 사회주의노동자당은 시리자의 집권을 환영하는 동시에 시리자의 집권이 자아낸 분위기를 이용해 투쟁을 더 전진시키려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리스에서는 투쟁수위가 전보다 낮았습니다. 다들 시리자가 집권하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전 정부가 폐쇄한 국영 방송국 ERT의 해고 노동자들이 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쟁에 가보면, 사람들은 ‘시리자가 집권했으니 정말 뭔가 변화했구나’ 하고 생각하며 투쟁을 벌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투쟁이야말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입니다. 혁명가들은 시리자의 당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 투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타르시아는 3월 21일로 계획된 인종차별 반대 국제 공동행동의 날에 시리자도 동참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비록 안타르시아는 총선에서는 1퍼센트도 득표하지 못했지만, 반자본주의 운동과 노동조합 안에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컨대, 혁명가들의 활동 방식은 이



“좌파는 투쟁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하고 동시에 토론하고 논쟁해야 합니다..”

렇습니다. 우파에 맞서서는 시리자 정부를 방어하며 시리자가 더 급진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압력을 가하고, 동시에 시리자가 후퇴하려 하면 이에 반대해 싸우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SWP의 창립자 토니 클리프는 1990년대가 느리게 돌아가는 1930년대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1990년대 상황을 돌아켜보면 이 말은 약간 과장이

었던 듯합니다. 그러나 클리프의 말은 오늘날 유럽의 상황에는 딱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30년대의 역사는 결국 재앙으로 끝났지만, 그 재앙은 필연은 아니었습니다.

1930년대 패배로부터 두 가지 핵심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 극우에 맞서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혁명가

들은 독자적 분석과 전술을 내놓을 수 있는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혁명가들은 여전히 개혁주의적인 의식의 노동자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투쟁할 때 혁명가들은 그들과 함께하고, 동시에 자신들의 사상 쪽으로 노동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런 교훈을 익혀 현실에 잘 적용하면 앞으로 우리 혁명가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

정리

활발한 토론 감사합니다. 우선, 신자유주의라는 모호한 말을 사용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는 민영화, 규제 완화, 법인세 감면, 노동자 쥐어짜기 등을 뜻합니다. 엄밀히 말해, 신자유주의에는 사회적 의미에서 자유주의적인 면이 없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최초로 실행된 곳이 피노체트 독재 정권 하의 칠레였음을 상기하면 됩니다.

결국 진정한 문제는 신자유주의라기 보다는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지배에는 항상 동의의 요소와 강압의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피지배자들에게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 지배자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보다] 지배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의 어느 지배계급도 따지고 보면 폭력에 의존해 자신들의 지배를 유지합니다.

둘째, 인종차별, 특히 프랑스의 이슬람 혐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이 세속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한다고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 번 맞는 말입니다. 원래 [19세기 후반] 세속주의는 매우 강력했던 가톨릭 교회를 정치 생활에서 몰아내기 위한 요구로 제기됐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가톨릭 교회는 지배계급과 긴밀히 연결돼 있었고, 그 자체로 강력한 억압자였습니다. 반면, 현재 이슬람은 당시 가톨릭 교회와 처지가 매우 다릅니다. 이슬람은 프랑스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에게 사회에 통합되라고, 주류 사상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주변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러시아 혁명 직후 레닌과 볼셰비키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볼셰비키는 무슬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안에서 여러분의 모스크 [예배 장소]와 종단 학교 등은 러시아 혁명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앞으로 소비에트 법을 따를지 이슬람 율법을 따를지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다.’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소비에트 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통은 스탈린이 권력을 장악한 뒤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주장도 흔히 있습니다. ‘이슬람 혐오는 인종차별이 아니다. 이슬람은 종교이지 인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종이라는 것은 언제나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만들어 내는 범주였습니다. 인종은 특정 집단이 갖는 고정불변의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종 구분에는 항상 신체적 특징과 문화적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에서 이슬람 혐오가 정확히 그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슬람 혐오는 인종차별의 최첨단 형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을 공격하기는 쉽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혐오의 확산을 내버려 두면 오래된 형태의 다른 차별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영국 상황이 [프랑스보다] 비교적 나은 것은 영국에 특별한 전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영국에서 우리[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는 무슬림 단체를 포함하는 광범한

반전 동맹을 구축했습니다. 우리는 좌파들이 무슬림과 함께 단결된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설득해 냈습니다.

다음으로, 인민전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민전선과 관련해 1930년대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반파시즘 투쟁에 관련해서는 인민전선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민전선은 혁명가들이 단결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컨대 영국수호동맹에 맞서는 공동전선을 결성할 때, 광범한 연합을 이루자는 유혹이 컸습니다. 점잖은 체하는 주류 정당까지 포괄하자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영국수호동맹을 거리에서 저지하는 전투적 전술을 채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공동전선은 광범한 단결이지만 그 안에서 혁명가들은 전술을 둘러싸고 다른 세력들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혁명가들의 전술이 더 낫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혁명가들은 공동전선에 참가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파시즘의 성장이 낳을 결과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째이자 매우 명백한 결과는 소수 인종과 무슬림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황금새벽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병원에 쳐들어가서 소수인종 환자들을 병상에서 끌어내 길거리로 내동댕이칩니다. 헝가리의 [노골적 파시즘 정당] 요빅당은 로마인 거주지에 들어가 방화를 저지릅니다. 이런 것들이 파시즘의 성장이 낳은 즉각적인 결과이고, 이것 때문에라도 우

리는 파시즘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파시즘의 궁극 목표가 단지 인종차별 조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파시스트들은 위기를 이용해 권력을 잡으려 합니다. 즉, 파시스트들은 거리 전투 조직을 건설해 그 힘으로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를 구할 독재를 시행하려 합니다. 히틀러가 독일에서 한 일을 재연하는 것이 오늘날 파시스트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파시스트들을 정치 토론의 장에 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파시스트들이 노동조합이나 학생회에서 발언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언론의 자유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제 마린 르펜이 영국 옥스포드대학교의 한 토론회에 초대돼 참가했습니다. 저는 마린 르펜 같은 파시스트와 생산적이거나 의미있는 토론을 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은 수천 명을 조직해 마린 르펜의 연설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의 혁명가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리스 좌파들은 그리스독립당이 연립정부에 참가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자본가 장관’들을 정부에서 쫓아내라는 것이 주요 요구가 돼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요구가 우파에 맞서 시리자를 방어하는 데 조건이 돼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며칠 전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 은행들에 ‘앞으로는 그리스 채권을 대출의 담보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선출되지도 않은 기구인 유

럽중앙은행이 시리자 정부를 압박해 부채 문제에서 굴복하도록 길들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동지들은 유럽중앙은행의 행태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선출된 시리자 정부를 우파에 맞서 방어해야 하지만, 아래로부터의 투쟁이라는 방식으로 그래야 합니다.

그리스 동지들은 또 다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동지들은 그리스 대중이 시리자에 큰 기대로 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 동지들은 사람들의 높은 기대감을 이용해 더 많은 투쟁을 일으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시리자에 투표한 사람들도 시리자보다 더 급진적인 반자본주의 좌파들의 투쟁에 동참케 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투쟁을 통해서만 노동자들은 자신들에게 사회를 변화시킬 힘이 있음을 자각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 얻길 기대한 변화를 전투적 계급투쟁을 통해서 달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긴축을 막아 내는 것을 넘어, 궁극으로는 자본주의를 분쇄할 세력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세력에 대해 협력도 하고 투쟁도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가능한 한 광범한 단결을 이뤄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전투적인 방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런 투쟁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킬 것입니다. 또한 혁명적 세력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통역 천경록 / 녹취 이재웅

교정·교열 차승일·최일봉

시리자의 집권과 혁명적 좌파의 과제

이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조셉 추나라가 2015년 2월 방한해 〈노동자 연대〉 신문 기자들과의 모임에서 한 강의를 녹취한 것이다. 질의 응답을 포함한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 실릴 예정이다.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덧붙인 말이다.

좌파 개혁주의 부상의 요인 ① — 정치 전통

우선, 왜 시리자 같은 좌파 개혁주의 경향이 약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좌파 개혁주의의 부상을 설명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특정 나라의 정치 전통, 둘째, 기존의 사회민주주의에 압박을 가하는 경제 위기의 심각성 정도, 셋째, 계급투쟁 수준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들을 각각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각국의 정치 전통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나라에 다양한 좌파 세력이 이미 존재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좌파 진영에서 오랫동안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강했고 그보다 왼쪽의 대안은 비교적 약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독일 서쪽 지역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은 좌파당(디링케)이 독일 서쪽 지역에서 생겨나게 된 한 이

유였습니다. 먼저 시민당에서 일부가 분열해 나옴과 옛 동독 지역의 공산당과 합쳐져 좌파당이 탄생했습니다.

그리스의 정치 전통은 다릅니다. 많은 그리스 좌파는 사회당(PASOK)을 좌파의 일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의 이런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려면 역사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 그리스에서는 나치의 정령에 맞선, 공산당이 주도한 강력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그리스에서는 처절한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 뒤 1960~70년대 강력한 투쟁이 일어났고 이때도 공산당이 큰 구실을 합니다. 1968년 이후 공산당이 분열하는 등의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그리스 사회에서 이례적려한 급진좌파들의 존재감은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 왼쪽의 좌파가 강력하게 존재한다고 해도, 좌파 개혁주의가 돌파구를 여는 것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탈리아가 좋은 사례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2000년대 초] 반자본주의 운동과 반란 운동이 일어나는 시기에 재건공산당(리폰타치오네 코무니스타)이 성장했습니다. 재건공산당은 [2006년] 중도좌파란이 일어났습니다. 제2차세계대전 전 이후 그리스에서는 처절한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 뒤 1960~70년대 강력한 투쟁이 일어났고 이때도 공산당이 큰 구실을 합니다. 1968년 이후 공산당이 분열하는 등의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그리스 사회에서 이례적려한 급진좌파들의 존재감은 상당했습니다.

좌파 개혁주의 부상의 요인 ② — 경제 위기

좌파 개혁주의의 부상을 설명하는 둘째 요인은 자본주의가 겪고 있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집권하고 있던 나라에서 위기가 끼친 영향은 특히 더 강했습니다. 그리스 사회당은 군부독재 종식 이래 그리스 자본주의에서 그야말로 주류 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 총선에서 득표율이 5퍼센트도 안 됐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경제 위기가 가하는 압박을 받고 있지만, 그리스 사회당의 몰락은 차원이 다른 종류의 현상입니다.



극심한 경제 위기로 쓰레기통을 뒤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좌파 개혁주의 부상의 요인 ③ — 계급투쟁 수준

위의 두 가지 요인이 시리자 같은 좌파 개혁주의가 성장한 배경이지만, 더 중요한 요인은 계급투쟁 수준입니다. 계급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장 투쟁이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아일랜드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일랜드 정부가 처음 긴축 정책을 시행하려 했을 때 노동조합들은 투쟁하였

다고 하다가 이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히려 거리 운동이 매우 강력하게 일어났고 지역 주민 조직이 성장했습니다. 최근 수도세 도입에 항의해 10만 명이 거리에 나왔는데, 아일랜드의 인구(약 4백80만 명)를 고려하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런 운동들은 정치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집권 노동당에 대한 좌파

적 대안으로서 신페인당[북아일랜드 공화국군(IRA)의 전통을 이어받은 좌파적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두 개의 급진좌파 정당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긴축 초기에 대중파업이 두 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이 두 대중파업을 억제해서 끝내자 광장 점거 운동 같은 거리 운동이 분출했습니다. 이 운동은 ‘인디그나도스’

운동이라고 불렸는데,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이 운동이 여러 형태의 다른 저항 운동들을 촉발했다는 것입니다.

교육과 의료 부문 긴축에 반대하는 커다란 운동이 일어나 병원을 점거하는 일도 있었고, 최근에는 ‘존엄성 행진’이라고 불린 대규모 거리 행진도 있었습니다. 이런 저항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포데모스의 중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도 투쟁이 끈질기고 강력하게 일어난 곳은 그리스입니다. 그 중심에는 노동자 투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노동자 투쟁과 함께 거리에서도 광범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발표한 공식 통계를 봐도, 2010년 이후 그리스에서는 매일 14건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32번의 총파업이 있었죠.

혁명적 파업과 관료적 파업

그런데 대중파업이나 총파업을 얘기할 때는 그 파업의 성격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파업에는 매우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파업도 있고 관료적 파업도 있습니다. 혁명적 파업의 대표 사례는 1905년 러시아에서 일어난 총파업입니다. 관료적 파업은 토니 클리프가 처음 사용한 말인데, 노동조합 상층 지도자들의 통제력이 매우 강한 파업을 뜻합니다.

1905년 러시아 총파업은 아래로부터의 주도력과 에너지가 충만한 파업이었습니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대중파업》에서 말했듯이, 이런 파업에서는 정치적 요구와 경제적 요구가 실질적으로 결합했습니다. 또한 지속성이 있었고, 파업이 성장하면서 더 많은 노동자들을 끌어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파업은 명백히 혁명적인 성격을 띠었습니다.

혁명적 파업의 또 다른 사례는 1968년 프랑스 대중파업입니다. 이 파업은 처음에는 하루 파업으로 시작됐습니다. 노동자들의 분노를 어느 정도 표출하게 한 다음 투쟁을 가라앉힐 목적으로 기획된 파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이 파업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파업이 부문

간 장벽을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파업 참가자의 4분의 3이 조합원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점점 더 평조합원들의 주도력과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의한 작업장 점거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파업 운동에 직면해 당시 대통령 드골은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골이 탄 비행기가 이륙할 때, 드골의 부인이 창문 밖을 가리키며 많은 공장 지붕에 붙은 깃발이 내걸려 있다고 말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이 파업을 잠재우는 데 3주가 걸렸습니다.

2011년 11월 영국에서 일어난 총파업은 이런 파업과는 양상이 매우 달랐습니다. 이 파업은 노조 지도자들이 지시한 것이었고, 평조합원 운동의 강력한 압력에 떠밀려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조 지도자들은 조합원 수가 감소하고 조합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에 불안해 하며 파업을 지시했습니다.

2백50만 명이 파업에 참가하고 대규모 시위도 일어났지만 지도부가 투쟁을 꺾 들어주고 있었습다. 이 파업 이후 노조 지도자들은 매우 신속하게 투쟁 계획들을 취소했습니다.



32번의 총파업 등 높은 계급투쟁 수준 덕분에 시리자가 집권할 수 있었다.

시리자와 좌파 개혁주의의 성격

제가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좌파 개혁주의 조직들의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개혁주의라는 말을 도덕적 비난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혁이나 혁명이나 하는 오래된 구분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유럽 좌파들 내에서는 개혁이나 혁명이나 하는 문제가 오늘날 발표한 공식 통계를 봐도, 2010년 이후 그리스에서는 매일 14건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32번의 총파업이 있었죠.

좌파 개혁주의가 급성장하니까, 개혁이나 혁명이나 하는 문제가 극복됐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좌파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말이 흔히 급진적인 것도 이런 혼란을 배가시킵니다.

이런 점에서 좌파 개혁주의는 트로츠키가 중간주의라고 부른 것과 꽤 비슷합니다. 트로츠키가 지적한 중간주의의 특징 하나는, 어느 중간주의자도 스스로 중간주의자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좌파 개혁주의의 급진적 연사는 우파 개혁주의를 오래 접하다 갑자기

동이 일어나면 2000년대 초 이탈리아 재건공산당은 반자본주의적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재건공산당 베르티노티 대표가 런던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문학적 어투로 말했고, 또 반자본주의 운동의 언어로 연설했습니다. 그러다 몇 달 뒤에 중도좌파 정부에 입각했습니다.

자본주의의 틀

따라서 좌파 개혁주의라는 규정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정당들이 국가

그리스, 관료적 파업에서 점차 대중파업으로 발전하다

2012년까지 그리스에서 일어난 총파업들은 처음에는 관료적 파업으로 시작했으나 갈수록 1968년 프랑스 대중파업처럼 발전해 나아가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처음에 노동자들은 파업 날 그냥 집에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급진좌파들이 파업이 일어난 것을 활용해 평조합원의 주도력이 발휘되도록 애썼습니다. 급진좌파들은 작업장 집회, 피케팅, 거리 시위 등을 조직해 평조합원 네트워크를 건설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2월에는 며칠 만에 48시간 총파업이 조직되기도 했습니다.

다. 평조합원 네트워크가 없었고 주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좌파들은 또한 총파업과 각 부문의 투쟁을 연결시키려 애썼습니다.

전에는 버스 노동자, 지자체 공무원 노동자, 병원 노동자 등이 파업을 벌이려면 노조 지도자들의 관료적 압력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이 한몫했습니다. 사회주의노동자당은 평조합원 신문을 발행하고 여러 부문 평조합원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려고 애썼습니다.

계급투쟁에서 정치의 중요성

여기서 한 가지 꼭 유념해야 할 것은 계급투쟁에 정치가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2012년 이후로는 그리스에서 투쟁 수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극심한 실업으로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진 것도 한 이유였지만, 2012년 5월과 6월 총선에서 시리자가 약진한 것도 이유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리자가 집권해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라는 주장에 사람들이 솔깃해지기 쉽습니다. 물론 부문별로는 매우 중요한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총파업과 여러 번 일어났고요. 그러나 2012년 이후의 파업들은 그전의 파업들처럼 반란의 기운이 충만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가지 상황

정치는 다른 식으로도 투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현재 시리자가 집권하면서 대중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시리자 정부가 대중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두 가지 상반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정부가 못 하면 우리 힘으로 정취하자'면서 투쟁에 더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리자가 노동조합 관료들을 위해 파업 운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조합 관료의 대다수는 사회당과 연계돼 있었는데, 사회당의 노동조합 기반이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은 노동조합 내 세력 구도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이처럼 노동조합 상층부가 유동적이고, 분열하고, 그 안에서 상대적 좌파가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평조합원의 주도력이 발휘되는 데 유리한 돌파구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과 자본을 중재한다는 노동조합 관료의 사회적 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상대적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안타르시아와 사회주의노동자당이 이 기회를 이용해 평조합원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운동을 더 전진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 9면에서 이어짐

치프라스가 내세운 구호입니다. 그러나 치프라스는 실천에서는 좌파 정부라기보다는 트로이카와 구제 금융에 반대하는 ‘국민 단결 정부’ 노선에 더 이끌렸습니다. 이런 민족주의적 성격 때문에 치프라스가 우파 정당인 그리스독립당과 연정을 맺는 데 열의를 보인 것 같습니다.

시리자 내 좌파들이 겪는 혼란에 대해 알고 싶으면 스타시스 쿠벨라키스의 인터뷰 기사를 읽어 보시면 됩니다. 그의 출발점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시위나 파업도 돌파구를 열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투쟁이 교착 국면에 도달했으니 의회를 통한 지름길을 찾자는 것입니다.

좌파 정부

쿠벨라키스는 그리스 마르크스주의자 니코스 폴란차스의 언어를 차용합니다. 폴란차스는 1970년대 유러코뮤니즘 경향의 이론가였습니다. 그는 국가 안팎의 투쟁 필요성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국가 바깥의 노동자 평의회와 국가 안의 좌파 정부가 나란히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안에도 노동자 계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존재한다고 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 안에서의 투쟁과 밖에서의 투쟁이 흔히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리자는 유럽연합과 맺은 양해각서 내용의 60퍼센트를 수용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행태는 자본주의 국가를 운영하려다가 나타나는 실용주의인데, 시리자에 투표한 사람들의 염원과 충돌합니다.

또한, 시리자는 그리스가 유로존과 유럽연합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매우 단호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유로존과 유럽연합에 남아 있는 것은 그리스에 더 나쁠 수 있습니다. 트로이카가 부채 재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혁명적 좌파는 트로이카의 시리자 정부 공격에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혁명적 좌파는 시리자 정부에 무비판적으로 기대서는 안 됩니다.

스페인 포데모스의 세 가지 이데올로기

왜 그래야 하는지는 스페인 포데모스가 더 잘 보여 줍니다. 포데모스의 뿌리는 시리자와 조금 다릅니다. 포데모스는 파블로 이글레시아스 주변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2014년 창당했습니다. 포데모스는 인디그나도스 운동 지지자들을 많이 끌어당겼고, 공산당 지지자와 사회당 지지자도 많이 끌어당겼습니다.

포데모스의 이데올로기는 세 가지 요소로 이뤄져 있습니다. 첫째, 라틴아메리카 에바도르·볼리비아·베네수엘라의 좌파 정부를 대안으로 보는 사상입니다.

둘째, 포데모스를 등장시킨 운동에서 득세하는 수평주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포데모스는 약 1천 개의 지역 ‘서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클들은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결정을 온라인

투표로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포스트마르크스주의 이론가 에르네스토 라클라우한테서 차용한 사상입니다. 라클라우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계급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계급주의를 극복하는 출발점으로 다양한 ‘사회운동’들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 담론을 부과함으로써 그 운동들에 일관성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운동들은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 하나의 주체로 융합될 수 있다.’

이런 라클라우의 사상을 차용한 결과, 포데모스는 흔히 운동 안에서 상식적으로 보이는 것을 주장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매우 중요한 바스크 민족 문제와 이민자 문제 등에서 갈팡질팡합니다.

포데모스 안에도 혁명적 경향이 있



급성정하고 있는 스페인 신생 정당 포데모스의 지지자들.

고, 그들은 포데모스의 출범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포데모스가 큰 성공을 거둔 뒤 이글레시아스는 지도부의 장악력을 키우려고 애썼습니다. 이글레시아스는 전보다 더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확립해 혁명적 세력을 주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처럼 포데모스

가 [의회주의적 의미에서] 점잖아지는 쪽으로 선회하는데도 지지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스페인 사람들이 ‘반정치’적이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스페인 사람들은 정치인들과 기득권 층이 모두 썩었다고 봅니다. 포데모스는 정치인들과 자본가들을 “카

스트”라고 부르며 비난하는데, 이것은 사실 대중의 주류 정치인 혐오 정서를 개혁주의의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개혁주의는 단지 개혁주의 조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득세하는 의식 형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혁주의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치명적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좌파 개혁주의에 대한 혁명적 좌파의 전술

마지막으로, 좌파 개혁주의를 대하는 혁명적 좌파의 전술이 어때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좌파 개혁주의의 성장을 환영해야 합니다. 간단한 이유에서인데, 좌파 개혁주의의 성장이 투쟁의 급진화를 반영하고, 사람들의 기대감을 높이는 데 일조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동전선 전술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개혁주의의 뿌리가 깊어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즉, 혁명가들은 공동 투쟁을 위해 개혁주의 지도자들과 제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누구와 관계를 맺을지는 계급 세력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개혁주의 단체 전체와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그 내부의 좌파와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형태는 복잡할 수 있지만 공동전선 전술의 기본 원리는 간단합니다. 만약 누가 보기에든 정당한 요구로 싸우자고 제안했는데,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거부하면 혁명적 좌파는 그 지도자들에게 발목 잡히지 않고 투쟁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혁명적 좌파는 개혁주의 단체와 함께 운동을 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 투쟁을 벌이면서도 혁명적 좌파는 어느 전술이 더 나은지를 주장해야 하고 자신들의 사상을 옹호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혁명적 좌파가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중

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노동자들에게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의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은 이런 방식의 실천이 적용된 좋은 사례입니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과 안타르시아는 시리자가 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끌어당겼습니다.

공동 투쟁

셋째, 혁명적 좌파는 좌파 개혁주의 정당 안에서 활동할 수도 있고, 바깥에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개혁주의 정당에 가입하느냐 마느냐는 원칙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에 입각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원칙의 문제이겠지만 말이죠.

유럽의 국제사회주의경향(IST) 자

매단체들은 나라들마다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독일의 마르크스21은 독립적 마르크스주의 경향으로서 좌파당 안에서 활동합니다. 그리스의 사회주의노동자당은 안타르시아에 속해 있지, 시리자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스페인의 엔루차는 지역에 따라 포데모스 안에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카탈루냐 주에서는 포데모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

다. 이 미 카탈루냐 지역에서 강한 좌파 민족주의 경향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

입니다. 넷째, 전술은 매우 복잡할 수 있지만, 언제나 전략은 종속됩니다. 혁명적 좌파의 전략은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대중 운동으로 국가를 분쇄하

는 것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그 전술은 혁명적 대중 정당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맞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혁명적 대중 정당을 건설하는 것은 한 명 한 명씩 가입시켜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의 개혁주의·중간주의 조직에서 혁명적 좌파가 떨어져 나오거나, 거기서 떨어져나온 세력이 혁명적 좌파에 합류하는 식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혁명적 대중 정당을 건설하려면 정치가 매우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세력과 관계를 맺든 혁명적 좌파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녹취 박충범 / 교정·교열 차승일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성명

시리자-유로그룹 합의안은 결코 통과돼선 안 된다

다음은 2월 24일에 발표된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성명이다.

2월 20일 시리자와 유로그룹이 맺은 합의는 긴축을 연장하는 것이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면 최소한의 약속도 팽개친 것이다.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이번 합의에 대한 유로그룹 공식 성명서가 서두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바, 즉 “연장의 목적은 현행 협약의 지원 조건을 기초로 이행 점검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그리스 정부와 관계기관들의 협의 하에 유연성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출 수 없다.

쉬운 말로 풀어 쓰자면, [긴축을 강요하는] 양해각서(“현행 협약”으로 표현이 바뀌었다)는 여전히 유효하고, 트로이카의 통제(“이행점검”)가 계속 된다는 뜻이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변경사항(“유연성”)은 트로이카(“관계기관들”)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번 합의에서 이득을 본 것은 은행가들뿐이다. 그들은 은행에 대한 통제권을 지키면서, 유럽중앙은행의 자금원조를 보장받고, 이 “현금 유동성”을 부채 돌려막기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도 그랬듯, 트로이카에서 오는 차입금은 은행가들의 부채를 갚는 데 쓰일 뿐,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 쓰이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노동자들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심지어 신임 장관들이 취임 직후 했던 약속들조차 모두 ‘동결’됐다. 정부는 지출을 삭감해서 ‘적절한’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하려 한다. 민영화된 공기업들이 재국유화되지도 않을 뿐더러, 민영화가 계속 추진될 것이다.

새 정부는 공공부문 해고 노동자의 복직을 약속했지만, 이는 신규채용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선박 소유주들에 대한 면세 규정은 건드리지도 못했다. 체불된 세금이 많은 부자들에게는 편의를 봐 줬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면세 조치는 트로이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만! 우리는 빚을 갚지 않겠다” 2월 26일 혁명적 반자본주의 좌파 안타르시아가 호소해 열린, 시리자 — 유로그룹 합의 반대 시위.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합의”의 영역으로 넘어갔는데, 이 말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면 노조가 사용자 단체와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행 연금 삭감 조치도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 정부는 기존의 정책이나 구조개혁 작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되돌림으로써 관계기관들이 평가하는 재정수지 목표, 경제 회복,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 충격을 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유로그룹 성명]

한 걸음 정도가 아니라 여러 걸음 뒤걸음질친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광장에서 시위를 벌였던 민중이 여전히 자신을 지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리자 소속 유럽의회 의원] 마놀리스 글레조스가 자신이 환상을 조장한 공범이었음을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이 더 옳다.

지금의 중요한 과제는 이런 파괴적 사태 전개를 막는 것이다. 대안은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노동자 투쟁이 계속돼야 한다. 노동자들은 지난 시기 양해각서에 따른 트로이카의 공격에 맞서 왔다. 우리는

노동운동의 모든 주요 요구가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런 요구들이 이번 합의 때문에 ‘동결’되는 것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 요구들은 다음과 같다:

모든 해고 노동자가 원래의 일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지난 몇 년간 폐쇄됐던 국영방송국 ERT, 학교, 병원 등을 전부 다시 열어야 한다. 공공부문에 대해 “재무건전성”이니 “직무 평가”니 임금 삭감이니 하는 말이 더는 나와선 안 된다.

COSCO[중국원양운수그룹] 같은 민간부문의 약탈자들을 향한, 공항, 철도, 수도, 발전 부문에서 쫓아내야 한다. 과거와 미래의 삭감에 맞서 임금, 연금, 단체협상 등을 모두 원래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

인종차별 정책(이민 2세대의 시민권 불인정, 이주민에 대한 경찰의 인종차별적 집중단속 계획 “제니오스 제우스”, 강제수용소, 터키와의 국경 지대에 펜스 설치, 유럽연합 국경관리청(Frontex)의 국경 순찰)을 중단해야 한다. 이는 난민 · 이주민뿐 아니라 노동계급 전체에 대한 공격이다.

네오나치인 황금새벽당을 보호했던 수단을 경찰, 사법부, 선박소유주협회 [그리스는 세계 최대의 선박 보유국]

다] 등 부문을 막론하고 박살내야 한다. 네오나치 살인마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반자본주의적 방안

이런 요구를 위해 우리는 파업, 집회, 작업장 점거를 재개해야 하고 제2의 마놀라다 투쟁[관리자가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수십 명에게 총기를 난사한 것에 항의한 투쟁]도 필요하다. 우리의 힘은 투표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과 그들의 투쟁에 있다. 어떤 “국민투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만일 국민투표가 붙여진다면 우리는 이번 합의를 정당화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노동자 투쟁과 요구사항을 정치적으로 일반화하는 것이다. 반자본주의적 행동 강령(부채 탕감, 유로존과 유럽연합 탈퇴, 노동자 관리가 수반되는 은행 국유화)은 이를 위한 수단이다. 어떤 투쟁이든 승리하려면 총체적 전망이 있어야 한다.

유동 자금을 막아 은행을 망하게 하겠다는 유럽중앙은행의 협박에 무릎 꿇지 않으려면, 또한 투기꾼들이 자본을 해외로 유출해 “뱅크런”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지 않으려면 은

행과 환율, 자본 흐름을 통제해야 한다.

이런 반자본주의적 방안은 노동자들이 “그만! 우리는 빚을 갚지 않겠다”고 말하며 벌이는 투쟁을 뒷받침하고 임금 · 연금 · 복지의 삭감을 막을 수 있다.

정부의 재정 통계를 보더라도 그리스는 지난 30년 동안 어마어마한 부채를 갚았는데 부채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었다. 부채 무효화는 더 미룰 수 없는 요구이고, 이 난국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다. 또한 일상의 모든 투쟁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셋째, 혁명적 반자본주의 좌파가 성장해야 한다. 시리자와 유로그룹(은행가들의 기구)의 타협은 개혁주의 노선이 막다른 길임을 보여 준다. 이것은 시리자의 일시적 후퇴가 아니다. 그보다는 시리자가 [우파 정당인] 그리스독립당의 카메노스[신임 국방장관으로 임명됐다], [최근까지 긴축을 밀어붙인] 신민당 소속의 새 대통령 파블로풀로스 [시리자가 다수인 의회가 선출했다], 그 밖의 자본가 계급 내 정치적 인사나 기구와 동맹을 모색하는 전략의 핵심적 일환이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개혁이나 혁명이나’는 질문에 대해 쓴 지 한 세기가 지났지만, 이 물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시의적절해지고 있다. “[‘개혁이나 혁명이나’라는] 종래의 이분법을 뛰어넘은 새로운 급진좌파”라고 시리자를 추켜세우며 이 질문을 피해가려 했던 사람들은 지금 궁색한 처지가 됐다. 용기 있는 자는 사과를 하고 수치를 모르는 자들은 변명거리를 찾고 있다.

실망하고 후퇴할 때가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혁명적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 때이다. 그 기회가 유실되기 전에 말이다. 지난 5년 동안 운동은 4개 정권을 무너뜨렸다. 그 운동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혁명적 좌파 조직에 가입할 수 있고, 또 가입해야 한다.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산물과 삶을 지배하는 사회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자.

번역 김준효

이렇게 생각한다

계급투쟁만이 지배자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

전 세계 노동자들이 급진좌파 정당 시리자가 그리스 선거에서 승리하자 희망을 품고 있다. 그러나 불과 몇 주 만에 그 희망은 빛이 바래고 있다.

시리자가 유럽 지배자들과 합의한 내용은 자신이 내세웠던 가장 온건한 목표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주류 언론은 사용자들과 은행들에 맞서 싸우려는 시도가 부질없는 걸로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좌파 내 논쟁도 그만큼 우울하기는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들은 시리자가 배신했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이 이상 얻는 것은 원래 불가능했다고 말한다.

사실 많은 노동자들에게 이런 경험

은 낯선 것이 아니다. 우리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기껏 파업을 일으켜 놓고서는 나중에 보잘것없는 합의안을 들고 와서 ‘이것을 받지 않으면 더 나빠질 뿐’이라고 협박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

그러나 그리스 안타르시아(혁명적 반자본주의 연합)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자들은 더 나은 대안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도 그렇다.

분명 우파 정치인을 대신할 좌파 정치인을 뽑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다. 그리스 정부가 채권자들과 협상을 벌이는 것도 그렇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못 된다.

인류를 해방시킬 유일한 세력은 바

로 노동자 계급이다. 물론 노동자 계급의 일상 생활을 들여다 보면 우리가 무력하다고 느낄 만한 일들이 수없이 많다.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살지는 시장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가 그 규칙을 어기면 악마 취급을 받고 탄압받는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생존하려면 우리를 고용하려는 자들에게 노동력을 팔아야만 한다.

“아래로부터 사회주의”

그러나 같은 상황을 사용자들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사용자들은 우리의 노동력이 있어야만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착취할 노동자가 없다면 은행과 정치인들이 무슨 짓을 해도 다

무의미한 일이 된다.

이처럼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차이가 바로 이 시스템의 핵심에 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 맞서 싸우려면 그 차이를 핵심에 놓아야 한다. 혁명적 사회주의자 로자 룩셈부르크는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자본주의라는 사슬은 처음 달궈진 곳에서 깨뜨려져야 한다.”

지배자들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겁주고, 때로 매수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잠재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가 떨쳐 일어나면 자신들이 끝장난다는 것을 안다.

선거 승리로 정권을 잡거나 개별

적인 직접행동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도우려는 사람들은 중요한 동맹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는 시스템을 분쇄할 수 없다. 미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핼 드레이퍼(1914~1990)는 그런 방식을 “위로부터의 사회주의”라고 불렀다.

그것과 반대되는 것은 “아래로부터 사회주의”다. 이는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노동자 계급 자신의 힘으로만 이룰 수 있다”는 카를 마르크스의 주장을 원칙으로 한다.

파업과 대규모 시위는 노동자 계급의 위력을 헐뜯 볼 수 있게 해준다. 사회주의는 바로 그 틈새를 활짝 열어젖히는 것에서 시작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칼럼

그리스 합의 이면에는 부채 이상의 것이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급진좌파 정당 시리자가 집권한 그리스 정부와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 사이의 2월 20일 합의는 매우 희한한 데가 있다.

협상을 질질 끌고, 결렬됐다 재협상하고, 뚜렷한 결말 없이 자리를 뜨는 것 자체는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보통, 협상에 임한 양측은 애매한 문구로 합의 결과를 발표해서 쌍방 모두 승리했다고 주장할 여지를 남기기 마련이다. 실제로 그리스 재무장관 야니스 바루파키스는 “건설적인 애매함”을 운하며 합의 결과를 좋게 포장했다.

사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바루파키스 자신이 거절했던, 악명 높은 ‘트로이카’ 감독 하에 그리스 “구제금융”을 연장해야 한다는 안을 압력에 밀려 수용했으면서 말이다.

반면, 바루파키스의 주된 상대였던 독일 재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는 정반대로 행동했다. 그는 이번 합의에서 시리자가 굴욕을 당했다고 비아냥거렸다. “아마 그리스 협상단은 유권자들에게 합의 결과를 해명하느라 진땀 꽤나 흘릴 것이다.”

독일은 왜 이렇게 세계 나간 것일까? 돈 때문은 아니다. 그리스가 4백25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갚을 수 있다고 진지하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보다는 부채 덕분에 가능해지는 것들 때문이다.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은 이를 두고 “부채를 무기한 이어 나가 채무국[그리스]을 영구적인 의존·종속 상태에 두는 것 [이] … 진정한 목표”라고 지적했다.

쇼이블레의 측근 고위관료 한 명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렇게 말했다. “부채를 경감해 준다는 쪽으로 논의를 계속하면, 앞으로 유럽에서 개혁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가면, 프랑스와 아마 이탈리아도 좋아하겠지만 말이다.”

다시 말해, 독일이 걱정하는 것은 그리스·아일랜드·스페인·포르투갈에 부과된 신자유주의 개혁 프로그램이 계속될 것인가다.

협상

독일과 EU는 2012년 3월 재정 협약에 근거한 신자유주의 개혁 프로그램을 EU 전체에 퍼뜨리려 한다. 여기서 “개혁”은 공공부문 삭감과 민영화, 노동계급의 협상력 약화시키기 같은 것들을 뜻하는 말이다.

[그들이] “개혁”에 집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영국 사례에서 보듯, 위기를 이용해 신자유주의를 심화시키는 것은 위기에 대한 지배계급의 여러 대응 중 하나다. 애초에 위기를 불러온 “자유” 시장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쪽으로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방어적인 이유도 있다. 독일 지배계급은 2000년대 내내 임금 조건을 공격해서 기나긴 경기 침체를 딛고 수출 경제를 재건했다.

그들은 경제 위기 때문에 파탄난 나라들에서 정부가 개입해 경제를 살리고 그 자금을 EU가 조달해 주면, 독일 모델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두려워한다.

그래서 구제금융을 이용해 독일 모델을 퍼뜨리려 애쓰는 것이다. 임금이 훨씬 싼 동아시아 경제와 경쟁하는 남부 유럽에서 이는 [노동계급의] 생활 수준을 가혹하게 공격한다는 뜻이다.

시리자의 선거 승리는 이런 계획에 치명적 위협이다. 그리스가 긴축을 거부하면, 스페인의 신진 급진좌파 운동인 포데모스에 어마어마한 힘을 줄 것이고,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도 더 큰 저항을 고무할 것이다.

이 때문에 [독일 지배자들은] 시리자를 협상장에서 이겨야 했을 뿐 아니라 시리자가 패배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야 했다. 물론 시리자를 지지하는 수많은 이들은 20일 합의에서 애써 희망적인 대목을 찾으려 하지만 말이다.

유로그룹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개혁”안을 작성할 때 바루파키스가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어쩌면 그리스가 정부 지출을 조금 늘릴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기를 바라자. 그러나 독일에게는 돈 잡아먹는 하마인 그리스 은행에 대응할 강력한 무기가 있다. 2월에 유럽중앙은행(ECB)은 그리스 은행들에 대한 지원을 끊을 수 있다고 협박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고위급 국제 금융인사”의 말을 전했다. “그들은 그리스를 모든 영역에서 쥐어짜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숨통을 조여 끝이 다가고 있음, 무릎 꿇을 때가 됐음을 그리스가 깨닫게 하려는 체계적 노력의 일환인 것이죠.”

이번 합의로 결코 갈등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EU와 협상해서 긴축을 끝낼 수 있다는 환상은 끝나야 할 것이다. 대중 투쟁만이 긴축을 끝낼 수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442호 / 번역 김준효

구제금융 연장 합의가 시리자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데이브 수얼

2월 20일 유럽 재무장관들이 그리스로 하여금 구제금융 연장에 합의하도록 강제하면서 그리스는 끝없이 채권자들의 통제 하에 네 달 동안 긴축을 시행할 처지가 됐다.

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국제통화기금으로 이뤄진 “트로이카”는 지난 5년간 그리스 은행들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신 그리스에 긴축을 강요했다.

결국 1월 25일 트로이카와 긴축을 끝장 내라는 대중의 염원을 안고 급진좌파 정당 시리자가 승리했다.

그러나 2월 20일 구제금융 연장 관련 합의가 이뤄지면서 트로이카는 긴축을 완화하는 조처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소셜리스트 워커〉가 인쇄되는 지금 트로이카는 그리스 정부가 제출한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다.[2월 24일 유럽 지배자들은 그리스 정부가 제출한 개혁안을 일단 수용했다. - 〈노동자 연대〉 편집팀]

이 개혁안에는 부유세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 계획도 있지만,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번 구제금융 연장 합의는 시리자의 공약 이행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시리자는 해고된 청소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는 대신 일손이 부족한 병원에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식으로 어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른 약속을 포기해야 한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TV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전투에서 이겼지만, 전쟁에서 이긴 것은 아니다.”



긴축을 강요하는, 그리스 노동자의 적 “트로이카”.

그러나 독일 재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는 시리자가 “그리스 유권자들에게 이번 협상 결과를 납득시키려면 애를 먹을 것”이라면서 흡족해 했다.

이번 합의까지 그리스 정부는 엄청난 압력에 시달렸다. 65억 유로의 빚을 2월 말까지 갚아야 했기 때문이다.

반대

여기에 구제금융도 2월 말에 끝나기로 돼 있었고, 예금 인출이 쇄도하면서 압력은 더 커졌다.

이제 그리스 정부는 6월까지 채무에 대한 새 합의를 이뤄야 한다.

시리자 지지자들은 덕분에 시간을 좀 벌게 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트로이카도 시간을 벌었기는 마찬가지이고, 또한 시리자가

수세에 밀린 상황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번 합의에 반대하는 시위 두 건이 2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하나는 인디그나도스 운동에 참가했던 활동가들이 조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혁명적 반자본주의 좌파 연합 안타르시아가 조직하는 것이다.

그리스 〈노동자 연대〉신문의 편집자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이렇게 말했다. “주요 요구는 이번 협상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안타르시아는 채무 불이행(디폴트), 유럽연합 탈퇴, 은행 국유화도 함께 주장합니다.”

“전에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다시 시위에 나올지 아닐지, 시리자에 대한 충성심이 계속 유지될지 아닐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2월 셋째 주, 대학노조는 신임 교육부장관과의 상견례가 있는 날 파업을 벌이겠다고 했다.

그리스 북부 도시 테살로니카 출신의 마놀리스 스타투폴로스는 전 정부에 의해 해고된 2천 명이 넘는 학교 경비원 중 한 명이다. 그는 〈소셜리스트 워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들은 게 맞다면, 이걸 유럽연합을 상대로 거둔 첫 승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고 다른 유럽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파노스는 이렇게 말했다. “노동자들이 투쟁하면 긴축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시리자 내의 비판자들을 비롯한 그리스 좌파들은 단결해서 투쟁을 지지해야 합니다.”

시리자의 유럽의회 의원이 구제금융 연장 합의를 강력 비판하다

시리자의 유럽의회 의원이자 [제2차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의 점령에 맞서 싸운] 반나치 레지스탕스로 유명한 마놀리스 글레조스가 이번 합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번 합의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트로이카를 ‘기관들’로,

양해각서를 ‘합의안’으로, 채권단을 ‘파트너’로 말만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글레조스는 당 내에서 즉각 반대 여론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긴축을 폐기하겠다고 한 공약을 보고 시리자에 투표했다.

“억압자와 피억압자 사이에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

원래는 사회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다가 사회당이 긴축을 지지하자 탈당해 지금은 시리자 소속의 유럽의회 의원이 된 소피아 사코라파와 시리자의 지도적 경제학자 존 밀로스가 글레조스의 성명에 신속히 서명했다.

은행가들을 꺾을 힘은 노동자 투쟁에 있다

정치인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가 빚을 갚지 않으면 다른 나라의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그 정치인들이 유럽 전역에서 일자리와 복지를 공격해 왔다. 임금을 너무나도 혹독하게 쥐어짠 나머지 심지어 독일에서도 1천2백만 명이 빈곤층이다.

위기가 터지기 전 돈을 벌 수 있겠으며 그리스에 돈을 빌려줬던 은행가들은 빌려준 돈을 이미 모두 회수했다.

그러나 시리자 정부의 재무장관 야니스 바루파키스는 유로존 재무장관들의 회의인 “유로그룹”에 참석해 빚을 모두

갚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시간을 조금 늦춰 달라고 했다.

바루파키스는 이런 타협으로 동맹을 얻기를 바랐다. 그러나 네덜란드 사회민주당 소속 [유로그룹 의장] 예룬 데이셀블룸은 강경하기가 독일 총리 메르켈 못지 않았다.

스페인·포르투갈·아일랜드 정부는 승리를 낙관하기 힘든 선거를 앞두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가 긴축에 맞선 대안을 보여 주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프랑스 사회당 정부와 이탈리아 민주당 정부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공격하고 있다.

[유로그룹] 회담장 안에서 긴축을 무너뜨릴 가망은 거의 없다. 하지만 회담장 밖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긴축에 맞서고 있다.

그리스에서 일어난 파업과 강력한 시위들은 일자리 삭감을 저지하고, 병원 폐쇄를 막고, 빈민들에 대한 전기 공급 중단을 가로막았다. 대중적 항의 운동으로 정부가 여러 차례 무너졌다.

노동자 계급 투쟁이 더 강해지면, 은행가와 관료들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보여 줄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442호 / 번역 이진화·김준효

107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박근혜의 여성 노동자 착취 강화 프로젝트에 맞서 투쟁을 선포하자

‘최초의 여성 대통령’ 취임 3년차를 맞는 노동자 계급 여성들은 다음 수치를 보면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성별보다 계급이 우선임을 절감할 것이다.

포브스코리아가 2014년 말 집계한 ‘2015 한국 100대 부자’의 재산 총액은 2013년 1월에 견줘 22조 9천1백 56억 원이 증가했다(이 수치는 부동산 자산은 포함하지 않고 보유주식 지분 가액만 집계한 것이다). 반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2007년 이후 1퍼센트 내외의 성장으로 정체 상태에 빠졌다가 2013년 2사분기 이후 계속 하락해 지난해 3분기에는 0퍼센트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파동 등 노동자들의 늘어난 세금 부담을 고려하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이미 마이너스다.

100대 부자에는 여성도 10명 포함됐는데, 여성 부호 1, 2위에 오른 삼성가의 이부진과 이서현의 재산은 각각 2조 3천7백1억 원, 2조 2천7백1억 원이었다. 2013년보다 무려 1조 1백 49억 원, 1조 1천7백2억 원씩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들의 처지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 고용이 양적·질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인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다.

여성 취업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섰고 2009년 이후 여성 고용률이 상승 추세이긴 하지만 대단한 증가는 아니다. 사실 여성 고용률은 2013년에야 1997년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또, 한국은 여성 고용률이 여전히 남성보다 무려 20퍼센트포인트 이상 낮아 OECD 회원국 중 최고 격차를 기록하는 나라들에 속한다.

이것은 한국의 여성들이 유난히 취업 욕구가 낮기 때문이 아니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2013년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 10명 중 9명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그런데도 2014년 여성 고용률이 49.5퍼센트에 그친 것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높은 양육 부담 때문이다.

게다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증가가 박근혜 정부나 기업들의 시혜인 것도 아니다. 착취하는 여성 노동자 수를 늘려 지배계급의 이익을 늘리는 것이 박근혜 여성 노동 정책의 본질이다.

이중부담

여성 고용의 질 향상 얘기도 터무니없는 과장이다. 2013년 이후 정규직 여성 노동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성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 감소 폭은 매우 작다. 2013년 3월 57.6퍼센트에서 2014년 8월 56.1퍼센트로 고작 1.5퍼센트포인트 감소했다(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여전히 여성 노동자의 절반 넘는 수가 비정규직인 것이다.

사실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뒀 추진한 여성 고용률 증대 정책은 고작 시간제 일자리 같은 저질 일자리 양산 정책에 불과했다. 시간제 일자리는 비정규직



지난해 3·8 여성노동자대회.

여성 노동자들은 단지 박근혜 노동 정책의 피해자가 아니라 이에 맞서 싸우는 투쟁의 주역일 수 있다. 여성의 평등과 해방을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연대해야 한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일자리인데 정부의 부추김 속에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연평균 10.4퍼센트씩 증가하며 지난해 8월 2백3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0.8퍼센트를 차지했다. 시간제 노동자 중 대다수(71.1퍼센트)가 여성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2013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6천 곳에서 시행된 초등 돌봄교실 정책은 쪼개기 계약 등 온갖 편법으로 많은 돌봄전담사들을 시간제 비정규직이나 위탁 비정규직으로 만들었다.

물론 시간제 일자리를 대거 늘려 여성 고용률을 70퍼센트까지 끌어올린다는 야심 찬 계획은 정부 뜻대로 잘 되지는 않고 있다. 정부는 애초에 교육 수준이 높은 30~40대 기혼여성들을 노동시장에 대거 끌어내려는 목적에서 보육 예산을 크게 늘렸다.

그러나 이 연령대 기혼여성들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별 변화가 없고 50대 이상 여성 취업이 크게 늘었다. 시간제 일자리가 양질이라는 주장 자체가 사기인 데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부족 때문에 젊은 여성 노동자들보다 50대 이상 여성 노동자들이 저임금 직종으로 대거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일·가정 양립 정책’으로 부르지만 여성 노동자들에게 이중부담을 강요하고 저임금 일자리를 고착화하는 정책에 불과하다. 노동시간 단축 공약은 내팽개쳤고 OECD 최장시간 노동은 거의 그대로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임금까지 하락하면서 여성 노동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생색내기

박근혜가 여성 고용률 증가를 위해 내놓은 무상보육, 돌봄교실 확대 등 복지 공약도 예산 부족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부유층 증세를 회피함으로써 노동계급과 여성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보육이나 간병 등 돌봄 직종에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강요로 서비스 질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는 규제 완화 정책으로 민간시설 공급을 확대하고 보육 시장화를 확대했을 뿐 질 좋은 공공보육시설을 늘리는 계획은 거의 내놓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들끓은 여론을 무마하고자 지난해 말 새누리당은 CCTV 의무화 법안만 내놓았을 뿐 정작 중요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책은 생색내기 수준에 그쳤다. 얼마 책정하지 않은 보조인력 도입 예산도 확보하지 않아 이조차 올해 시행이 어렵다고 한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은 여성·노동계의 반발도 있었지만 기업주들의 호응도 크지 않았다. 한국에서 전일제 여성 노동자 일자리 다수가 이미 저임금 일자리인 상황에서 다수 기업주들은 여성 노동자를 시간제보다 전일제 비정규직으로 착취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 한다.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은 최소화하면서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내 착취하려면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야 한

다고 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노동자 계급 내 분열을 부추겨 단결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노린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회복은 여성과 남성 노동자 모두의 착취 강화를 통해 이뤄졌다.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조짐을 보이자 박근혜 정부는 남녀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려 혈안이 돼 있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을 온갖 논리로 이간질하고 있다.

정규직 일자리 공격을 강화해 비정규직을 더욱 늘리고 비정규직 내에서도 차별을 강화하려 한다. 지난해 말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내용이었다. 노동계급 전체를 겨냥한 이 공격이 관철되면 가뜩이나 열악한 여성 노동자들의 조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연금도 공격하고 있고, 철도·의료 등 공공 서비스를 악화시키는 민영화·시장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저임금과 취약한 공적 연금 제도 때문에 한국 여성 노인의 빈곤율은 이미 OECD 1위다. 공무원 연금 개악은 국민연금 개악의 전초전이므로 단지 공무원들이나 공무원·교사 같은 일부 정규직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또한 공공서비스 악화는 대다수 여성과 노동계급 전체에 해를 입힌다.

반격

박근혜가 노동자 계급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려 하지만 이에 맞서 노동자들도 반격하려 한다.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가 호소한 4월 총파업에 여성 노동자들의 동참이 중요하다. 여성 노동자들은 단지 박근혜 노동 정책의 피해자가 아니라 이에 맞서 싸우는 투쟁의 주역일 수 있다. 여성의 평등과

해방을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연대해야 한다.

연초부터 벌어지는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박근혜의 여성 노동 정책의 본질을 폭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과 공공기관 예산 삭감 때문에 학교와 관공서 등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하고 초단시간 근무 등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일이 일어났다.

올해 1월 부산시 14개 구·군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둔 방문건강관리사 1백70명을 해고했다. 부산·충남에서 해고된 방문건강관리사 50여 명은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투쟁하고 있다. 경북 초등 돌봄노동자들은 학교측의 주 15시간 미만 근무 계약 강요 등에 반발해 2월 12일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 외에도 많은 학교 비정규직과 대학 청소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과 임금 인상을 위해 투쟁을 벌이거나 준비 중이다. 전교조도 정부의 강화되는 공세에 반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올해 3월 7일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3·8 전국 여성 노동자대회’는 박근혜의 여성 노동자 착취 강화 프로젝트에 맞서 여성 노동자들의 투지를 모으는 날이 될 것이다. 이 대회를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표하고, 여성 노동자들과 남성 노동자들이 단결해 4월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자.

정진희

함께 참가합시다!

차별과 폭력 없는 좋은 일자리를 위한
107년 3·8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일시 : 2015년 3월 7일 (토) 오후 2시
장소 : 서울 시청 동편광장 - 행진
주최 : 민주노총



폴 크루그먼의 잠을 설치게 만드는 중국 경제 위기

이정구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소속 연구원

얼마 전 뉴욕 증시에 기업을 상장한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馬雲)의 성공 신화가 중국 대륙을 뜨겁게 달궜다. 총리 리커창도 “중국 경제의 새 엔진으로 창업자를 1억 명으로 키우겠다”고 공언했다. 마윈 현상을 계기로 지난해 중국에서는 2백91만 건의 창업이 있었다. 이런 벤처 열풍 또는 창업 열풍은 1990년대 말에 부상했다가 2001년에 몰락한 미국의 닷컴 호황을 연상케 한다.

알리바바의 성공적인 기업 공개(IPO)와 벤처 열풍과는 달리 중국의 실물경제는 뚜렷한 침체 양상이다. 중국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하나 둘씩 중국을 떠나면서, 폐쇄된 공장과 실업자들이 늘고 있는 게 그 징표다. 최근 일본 시계업체 시티즌(CITIZEN)의 현지 공장인 광저우 시테(西鐵)정밀이 지난 설 연휴 직전 기업 청산에 들어갔다. 지난해에는 마이크 로소프트사가 중국 내 노키아공장을 폐쇄하면서 9천 명이 실업자가 됐다.

중국 남부의 최대 공단지역인 둥관에서만 대형 기업 1백여 곳 이상이 도산하거나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그래서 홍콩의 봉황망(鳳凰網)은 “둥관은 중국 경제의 축소판으로, 이 지역 경제의 몰락은 중국 경제 침체의 서막”이라고 지적했다. 원저우의 1회용 라이터 생산업자는 “지난해 상반기 5백여 곳에 이르던 업체 수가 1백여 곳으로 줄었다”며 “이번 춘제 이후 라이터 생산업체에서만도 일자리 2만여 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경제의 침체는 거시경제 지표로도 드러나고 있다. 2014년 7.4퍼센트를 기록한 중국 경제 성장률은 1990년(3.8퍼센트) 이래 24년 만에 가장 부진했고, 또 16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 성장을 둔화의 주된 요인은 부동산 경기 침체, 대외 무역 둔화, 설비투자 축소 등이다.

경기 둔화

〈파이낸셜 타임스〉는 갈수록 취약함을 드러내는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력과 철강 생산의 감소가 중국 경제의 민낯을 보여 주고 있다며, 이렇게 중국에서 감축된 생산 규모는 말레이시아 경제 규모의 갑절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 점이 제대로 반영되면 중국의 지난해 실질성장률은 5퍼센트 정도로 추락한다. 이 때문에 폴 크루그먼은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중국 경제 침체가 나를 겁나게 한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가 침체에서 쉽게 벗어나기 힘든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 수익성의 전반적 하락이다. 지난 1월 27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연간 매출 2천만 위안 이상인 공업 기업의 이윤 총액이 지난해 11월에는 전년 동기(同期) 대비 4.2퍼센트 감소했고 1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8퍼센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간 이윤 총액 증가율도 2013년 8.9퍼센트에서 2014년 3.3퍼센트로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산업 이윤율이 하락하고 있



휘청거리는 “세계의 공장” 경제가 호황기에서 불황으로 전환할 때 노동자들의 저항은 예상치 못한 사회 격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의 산업 이윤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부동산과 단기 고수의 상품에 몰렸다. 하지만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계속될 수는 없었다. 중국에서 산업 이윤율 감소와 부동산 거품 붕괴 위험 때문에, 중국으로 몰려들었던 자본들이 이제는 중국을 빠져나가고 있다.

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부동산과 단기 고수의 상품에 몰렸다. 하지만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계속될 수는 없었다. 최근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월간 신축 주택 판매가격 추이를 보면, 주요 도시 70곳 중 66곳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했고, 하락률도 최대 5퍼센트에 이른다. 주택 거품의 붕괴로 주택 건설과 관련된 건축과 건축자재 분야가 침체에 빠졌고, 주택 가격 상승 전망에 기초한 소비 증가 효과도 사라졌다.

중국에서 산업 이윤율 감소와 부동산 거품 붕괴 위험 때문에, 중국으로 몰려들었던 자본들이 이제는 중국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 자본들은 전에는 고수익을 보장했던 다양한 “그림자 금융” 상품들, 즉 자산관리상품(WMP)들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자료를 보면, 지난 6년간 중국에서 만기 1년 미만 단기 부채의 총량은 무려 7배로 늘었다. 2009년 3월 1천2백10억 달러에서 2014년 9월에는 8천5백억 달러였다. 2015년 2월 초 인민은행은 단기자금의 유출을 줄이기 위해 지급준비율을 0.5퍼센트포인트 인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중국 경제에 형성된 거품의 빠른 붕괴나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은 중국의 금융 시장을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중국 자본들의 해외 진출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유럽 금융업계의 부실자산을 겨냥해 그렇다. 최근 푸싱그룹이 포르투갈 피델리다데의 지분을 인수했고, 하이퉁증권이 에스피리 코산토의 투자은행 부문을 인수했으며, 안방보험은 소규모 벨기에 은행과 피데아 인수를 추진 중이다. 그래서 지난해 중국 기업들의 유럽 금융업 투자는 2013년의 10배로 증가했다. 이제 중국의 자본 유출입을 볼 때 해외직접투자 유입국에서 해외투자국으로 바뀌고 있다.

“그림자 금융”

중국 산업의 이윤율이 저하하고 있으므로 부동산과 각종 신탁금융 상품들에 자금이 몰렸다. 그런데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높은 수익을 보장했던 자산관리상품들의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거품 붕괴와 부실은 금융기관들의 부실과 지방정부의 부채 증대로 나타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 은행 보유 부실채권이 17조 달러로 급증했다고 경고했다. 또한 지방정부 부채는 2008년 5조 6천억 위안에서 2013년 17조 9천억 위안으로 3.2배 증가했다.

더욱이 이제는 중국도 유로존과 마

찬가지로 디플레이션 위험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이 기관지 〈금융시보〉를 통해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꽤 근접해 있다고 보도했다. 2015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0.8퍼센트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때문이다.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처한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을 것이고, 더 많은 노동자와 농민공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악순환을 만들어 낼 것이다.

산업생산 둔화와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이로도 모자라 두 달 뒤에는 지급준비율을 내리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경기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5년 1월의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지난해 12월보다는 약간 상승했지만 고정자산 투자는 5개월, 부동산 개발투자는 10개월 내리 하락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이미 많은 통화를 시장에 뿌린 상태라서 통화 증대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뉴노멀”

지난해 12월 열린 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지배 관료들은 최근 저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국 경제를 “뉴노멀”(New Normal, 新常态)이라고 표현했다. 고속 성장에서 중고속 성장과 과잉생산 산업의 도태를 수반한 심도 있는 조정 등이 그 내용이다.

이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과잉생산 상태인 전통 산업과 에너지 산업에서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석유천연가스공사(CNPC)와 중국석유화학공사(Sinopec)의 합병,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와 중국 국영 화학에너지 업체 시노켄(Sinochem)의 합병을 고려하고 있다. 그 과정은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를 동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중국노동회보〉(China Labor Bulletin)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노동자 투쟁은 구조조정, 공장폐쇄, 공장이전으로 인한 매각이나 합병 등에 반대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다.

〈중국노동회보〉를 보면, 2011년에서 2013년까지 노동자들의 파업과 항의 시위가 1천1백71건 있었다. 그 대부분은 중국 산업의 심장부인 광둥 지역에서 벌어졌으며, 그 주된 요구들은 실업 보상, 체불임금 지급, 임금인상 등이었다. “중국의 노동자들은 가난하고, 착취받는 개인에서 적극적이고 역동적이며, 자신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집단으로 등장하고 있다.”(〈중국노동회보〉)

중국 경제는 세계경제의 핵심 부분이자 세계의 공장이 됐다. 하지만 2008년부터 심각해지기 시작한 세계 경제 위기는 “세계의 공장”을 휘청거리게 만들었고, 이것은 “세계의 공장”에 공작기계와 원자재를 수출하는 독일과 호주 같은 경제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경제가 호황에서 불황으로 전환할 때 노동자들의 저항이 나타나면 예상치 못한 사회 격변이 벌어질 수 있다. 오늘날 중국의 상황이 딱 그렇다.

사드 배치 논란

제국주의 간 갈등을 키울 짓 중단하라

김영익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가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다.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부로, 미국은 지금껏 이를 한국에 배치하려 애써 왔다.

한동안 잠잠했던 사드 배치 논란은 지난해 6월부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주한미군 사령관 커티스 스캐퍼로티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이후에도 사드의 한국 배치 얘기가 미국 정부 안에서 수차례 나왔다.

또다시 2월 10일 미국 국방부 대변인 존 커비가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한국과 지속적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물론 한국 정부는 ‘혐의한 적이 없다’고 적극 부인했다. 나중에 커비도 “공식적 협의나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공식적’ 협의가 없다는 말은 “오히려 [한미 간에] 비공식적 협의는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것을 실토한 셈이다.”(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 삼아 중국 견제를 위한 수단인 하 나로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X밴드 레이더를 한국에 배치하면 중국 동북부 지역의 주요 군사 활동을 감시하고, 특히 중국 핵·미사일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2012년 이 레이더를 백령도에 배치하자고 한국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체결됐기 때문에, 이 여세를 몰



사드의 포대 하나 구입비만 1조 원 정부는 긴장과 갈등을 악화시키는 데 천문학적 돈을 쏟아붓고 있다.

아 오바마 정부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더 강화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을 대중국 견제 노력에 더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용’으로 사드 배치 관련 발언을 흘리는 듯하다.

압박용

당연히 중국은 사드 배치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사드 배치 여부

가 한중 관계의 ‘레드라인(금지선)’이라는 얘기가 중국 쪽에서 공공연하게 나왔다. 시진핑은 지난해 7월 한중 정상 회담에서 박근혜에게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리고 올해 2월 4일 중국 국방부장 창완취안도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

이로써,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가 미

국과 중국, 두 제국주의 간의 갈등에서 주요 쟁점 하나가 됐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 정부와 사드 배치 문제를 혐의한 적이 없다고 줄곧 부인해 왔다. 그러나 언제나 ‘뒷문’은 열어놓고 있었다. 지난해 국방장관 한민구는 사드 배치가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도 박근혜 정부는 사드를 직접 ‘구입’하지는 않겠

다고 할 뿐,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을 반대한다고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우익은 사드가 ‘대북용’임을 명확히 하고 중국을 설득하면 된다면서 사드를 도입하라고 갈수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미국 MD에 편입되지 않는다고 말해 왔지만, 실전은 언제나 미국 MD에 협력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이 대표적인 협력 사례다. 미국 국무부 군축국 수석부차관보 애니타 프리드는 최근 이렇게 말했다. “[한·미·일 3국의] 상호운용적인 지역 미사일방어 구조의 개발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의 초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따라서 북한 핵개발 상황이 너무 나아가지 않게 간헐적으로 대화 제스처를 취할지라도, 오바마 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기존의 ‘전략적 인내’를 고수할 것이다. 북한 ‘위협’을 과장해, 미국이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챙길 게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의 지적대로, 만약 북한이 추가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한다면 “미국은 이를 핑계 삼아 사드 배치로 분위기를 몰고 갈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제2의 쿠바가 될 수 있다(즉, 미국이 북미 관계 정상화에 나선다)’는 일각의 기대는 당장 현실화되기 어렵다.

사드의 한국 배치나 MD 협력 강화는 모두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주의 국가들의 갈등과 경쟁을 악화시킬 일이다. 이런 시도는 모두 그리고 즉시 중단돼야 한다.

이라크에서 군사작전을 확대하려는 오바마

박근혜 정부는 미국 지원을 중단하라

김종환

최근 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군사 개입 수위를 한층 더 높이려는 듯하다. 지난해 8월부터 미국이 주도한 공습 수천 건으로 수많은 이라크인과 시리아인들이 목숨과 터전을 잃었는데, 이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2월 11일, 오바마는 향후 3년간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이하 아이시스)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이 계획을 제출하면서 오바마는 ‘필요시 지상에서 특수부대를 활용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오바마는 ‘지상군 파병은 없다’(2014년 8월), ‘이라크에 지상군을 보내지만 군사작전은 하지 않는다’(2014년 9월)며 조금씩 개입 수위를 높여 왔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을 아이시스한테서 탈환하기 위해

이라크군과 쿠르드 민병대와 함께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에 박근혜 정부는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중동 개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미 박근혜는 재정적으로 미국의 개입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과 주류 언론은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아이시스의 잔혹한 행위를 막고 인명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다. 오히려 미국의 개입은 이라크를 더한층 파비린내나는 지옥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국내 반전·평화 단체들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군사 행동 확대는 IS[아이시스]를 뿌리 뽑고 지역의 인도주의 위기를 해결하는 결과로 결코 이어지지 않는다”(반전평화연대(준)성명)며 반대하고 있다.

리비아를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알 수 있다. 2011년 리비아 혁명 때 독재자 카다피가 사람들을 살해하자 서방은

‘독재자한테서 리비아인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폭격을 시작했다. 공습이 마무리된 후 영국 <가디언>은 “적어도 인명을 구한다는 목적에 비취서는 재정적으로 실패했다”고 폭로했다. 서방이 개입하기 전까지 죽은 리비아인이 대략 1천~2천 명(유엔 추산)이었는데, 서방 개입 후 리비아 내 유혈낭자한 총돌이 격화돼 약 3만 명이 죽었다는 것이다.

더 큰 비극은, 서방 개입으로 혁명이 일탈하면서 리비아는 지금도 내전 직전의 상태로 크고 작은 유혈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아이시스 세력이 등장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런 비극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미국 등 서방이 개입한 2000년대 이라크,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에서도 그랬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개입하는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라크·시리아 개입과 박근혜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미국의 비군사적 개입도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는 옳게 반대하면서도, 미국이 “이란까지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상과 외교 테이블에 자국 관리들을 앉혀서 시리아 내전을 대화로써 하루라도 빨리 끝내게끔 해야 한다”는 견해가 진보 진영 안에 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정치적 개입을 촉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 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종단·종파·부족 간 갈등을 악화시킨 미국이 시리아에서는 다르게 행동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아사드는?

게다가 현실에서 이런 요구는 시리아에서 종파간 갈등을 부추기며 자국민 20만 명 이상을 학살한 아사드 독재 정권을 온전히 남겨 둔다는 문제도 있다. (이란은 그동안 아사드 정권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며 학살에 동참해 왔다.) 종파 갈등 조장

의 ‘세계 챔피언’(미국)과 ‘마이너리그 챔피언’(이란, 시리아)에게 평화를 기대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 대안이 못 된다.

무엇보다, 미국과 이란이 나서야 한다는 접근법은 시리아 혁명이 시리아인들의 아래로부터의 행동에서 비롯했다는 점을 놓친다. 지금도 시리아의 많은 혁명가들은 주변국들의 개입 종단을 촉구하고 있다. 시리아인과 이라크인들의 아래로부터의 투쟁만이 그 지역의 종파간 갈등을 끝낼 수 있다.

미국 등 제국주의의 정치적 개입은 인도주의적 위기를 막지 못할 뿐 더러(미국의 개입으로 ‘권력 이양’을 이뤘지만, 오늘날 반혁명 세력, 알카에다 세력, 정부군이 서로 싸우는 예멘을 보라), 혁명 세력의 잠재력도 억누를 것이다. 미국 등 서방의 군사적 개입뿐 아니라 개입 일체에 반대해야 한다.



사진 이미지

지난해 11월 1일 12만 명이 모인 '공적 연금 개악 저지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

전교조

4·24 연가투쟁을 향해 시동을 걸다

김현옥 전교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TF팀 성원

2월 15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는 4월 24일 연가투쟁(안)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2월 28일 열릴 대의원대회에서도 전교조 지도부의 연가투쟁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2006년 성과급·교원평가 등에 맞선 연가투쟁 이후 거의 10년 만이다. 그만큼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공무원과 교사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이르고 노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대의원대회 자료집)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은 이미 지난해 12월 지도부 선거에도 반영됐다. 연금 투쟁 전술에서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위원장 후보 세 명 모두 공무원연금 개악을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그중 변성호·박옥주 후보조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좀 더 분명히 표방했고, 이를 위해 연가투쟁을 조직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당선됐다. 조합원들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투쟁을 호소하고 투쟁을 잘 이끌어 줄 지도부를 원했던 것이다. 물론 다른 면에서도 이 선대본이 더욱 선명했다.

세계경제 위기가 다시 심화할 개연성이 큰 올해, 지배자들의 고통전가

공세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계급에 떠넘기는 것이 지배자들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자체가 그 역사적 임무를 떠맡고 출범했다.

"선제적 연가투쟁"

박근혜는 2015년 신년사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혁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공무원연금 개혁이야말로 개각 이후 새 출발의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2월 21일 자 사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변성호 집행부가 "선제적 연가투쟁"을 선언했다. 박

근혜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공공연히 선전포고한 상황에서 정부나 국회 일정을 뒤쫓으며 뒷북치기 하기보다 선제적 연가투쟁을 벌여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경제 위기, 부패,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갈등,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 같은 정치적 운동과 노동자들의 저항 등 누적된 요인들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다. 게다가 4월 29일에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다. 선거 패배를 모면코자 박근혜 정권은 4월 투쟁의 예봉을 피해 연금 공격 타이밍을 다소 늦출 수도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이 행여 공격시점을 다소 늦추더라도 전교조는 4월

24일 연가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다. 상대방의 위기를 이용해 유리한 고지대에서 투쟁하는 게 전술적으로 이롭다.

특히, 연가투쟁의 규모가 중요하다. 4월 24일 연가투쟁의 규모가 클수록 박근혜 정권이 실질적 공격을 할 공산이 큰 5~6월에 발휘돼야 할 대응력도 더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전교조 활동가들은 전교조 지도부의 4월 24일 연가투쟁 호소에 최대한 많은 조합원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기층 조직화에 최선을 다하자.

※ 이 글은 개인 자격으로 쓴 글이며, 전교조의 현장 교사들이 발행하는 <별책교사들> 24호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기고했습니다.

건설노조 대의원대회가 4월 총파업을 만장일치 결의하다

박재순 건설노조 대의원

2월 26일 충북 영동에서 2015년 건설노조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지난해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에서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 구호를 내걸고 당선한 한상균 집행부가 4월 24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건설노조의 4월 총파업 동참을 결의해야 하는 무척 중요한 대회였다.

노동자연대는 대회 시작 전에 '대대에서 힘있게 4·24 총파업을 결의하고 조직하자'고 호소하며 리플릿을 배포했다. 일부 대의원들은 "투쟁할 거면 제대로 하자는 거죠? 꼭 그렇게 합시다!" 하며 지지를 나타냈다.

대의원대회에서 이용대 건설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감한다. 건설 노동자들이 선봉에 서서 총



사진 이미지

2014년 민주노총 동맹파업에 참가한 건설 노동자들. 건설노조의 4월 총파업 결의는 다른 노동자들에게 힘을 주고 있다.

파업을 성사시키자"고 포문을 열었다. 이종화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도 연대사를 통해 "자신감을 갖고, 눈치보지 말고, 건설 노동자들이 앞장서자"고 말했다.

지도부의 호소에 대의원들도 호응

을 했다.

한 대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1년에 한 번씩 올라와 팔뚝질 하고 다시 내려가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제대로 싸우자고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토론하자."

또 다른 대의원이 말했다. "더는 참을 수 없다. 우리의 목숨이 달린 투쟁이라 생각하고 총파업을 성사시키자."

나도 발언했다. "4·24 총파업에 우리 건설노조가 선봉에 서자. 우리의 총파업 결의는 다른 산별·연맹들이 총파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줄 수도 있다."

대의원대회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동참을 포함해 올해 건설노조 투쟁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는 '정부가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폐지를 강행할 경우, 민주노총 총파업 전에 건설 노동자들이 먼저 무기한 상경 파업에 돌입한다'는 긴급 결의안도 채택했다.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는 건설 기업들이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아 노동조건을 하락시키지 못하도

록,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다. 행정자치부가수급조절위원회 폐지를 은밀히 추진하는 것이 대의원대회 하루 전에 폭로돼, 조합원들의 분노가 컸다.

건설노조가 즉각, 강력한 투쟁 계획을 채택하자 정부는 곧바로 꼬리를 내려 안을 폐기했다고 한다. 건설노조의 상경 파업으로 민주노총 4월 총파업 분위기가 고양될까 봐 서둘러 양보한 것이다.

'뺑파업'에 신물 난 조합원들은 지난해 말 민주노총 선거에서 '언행일치 총파업 지도부'를 선출했다. 건설산업연맹의 세 가맹노조들(건설노조, 플랜트건설노조, 건설기업노조)도 모두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을 결의했다.

이제 나를 비롯해 현장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주장하고 조직하며 실질적인 총파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가자! 4·24 총파업으로!